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 2000 ~ 2023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

2000-2023

전주희 정우준

4·9 통일평화재단 | 노동건강연대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2000~2023

2024.03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2000~2023

인	쇄	일	2024년 3월 29일
발	행	일	2024년 3월 29일
발	행	처	노동건강연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102호
전		화	02-469-3976
이	메	일	laborhealthh@daum.net
편		집	박한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연	구	진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문제의식과 의미	1
2. 연구 방법	2
3. 연구의 한계 및 이후 과제	3
II.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	5
1. 왜 산재 유가족운동인가?	5
2.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 통시적 경향 분석	8
1) 연구방법	9
2)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 : 시기별 특성을 중심으로	11
① 산재 유가족운동 1기(2000 - 2007) : 가족의 산재사망이란 재난에 직명한 익명의 피해자인 동시에 보상의 수급자	14
② 산재 유가족운동 2기(2008 - 2015) : 진상규명과 인정, 집단적 대응과 연대의 시작점 19	
③ 산재 유가족운동 3기(2016 - 2023) : “진태일도 몰랐는데, 내가 이소선처럼 싸울 줄이야”	27
3) 결론과 과제	36
III. 산재 유가족운동과 진상조사보고서	38
1. 유가족운동과 진상조사 현황	38
2. 사건별 진상조사 활동 분석 : 유가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44	
1) 구의역 ‘김 균’ 사망사고	44
2) 이한빛PD 사망사고	57
3)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망사고	62
4) 집배원 과로사· 과로자살	69
5)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사고	74
6) 김용균 사망사고	77
7) 서지운 간호사 피로힘 자살사고	83

8) 문중원 기수 자살사고	85
9) 이재학PD 자살사고	88
10) 김재순 산재사망사고	91
11)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92
12)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93
13) 이힘찬PD 자살사고	95
3. 소결	98
4. 참고문헌	104
1) 진상조사보고서	104
2) 그 외 참고자료	105
5. 별첨	106
IV. [별첨] 토론문	110

I. 서론

1. 연구의 문제의식과 의미

한국사회에서 산재사고는 오랜 기간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반복되어왔다. 그 결과 산재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채 산재은폐가 구조화되었다. ‘숨겨진 산재’는 산재 피해자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감춘다. 산재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으로 남겨진 유가족 그리고 피해노동자의 동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죽거나 살아남았다.

한국사회 산업재해 해결의 실패는 산재 원인 규명의 실패이자, 산재 피해자의 지우기의 결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 산업활동에 따른 부수적 피해로 정당화되어왔다.

다만 몇몇 사례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사회적 사실로 산업재해를 드러냈을 뿐이었다. 문송면군 사망,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고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IMF 위기를 틈타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했고, 나아가 위험의 책임을 합법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위험이 증폭되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던 와중에 2014년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시민들의 위험인식이 증가하던 시점과 맞물려 사건화되었다.

또한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한 유가족들의 활동은 구의역 사고 이후 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을 추동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산재사망 사고에서 유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을 조사하여 2016년 이후 본격화된 유가족 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조사, 연구했다.

구의역 사고 이전에도 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은 존재했다. ‘진상규명’을 전면에 내걸고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와 함께 주체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유가족운동’의 처음은 무엇일까?

1999년 산재노동자 이상관의 자살로 시작된 ‘이상관 투쟁’에서 유가족(아버지)은 대책위(〈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160여 일이 넘는 투쟁의 처음과 끝을 지켰다.

5개월에 걸친 공단 앞 농성투쟁에 참여하며, 4~5차례 이뤄진 농성장 침탈을 시민대책위와 함께 막아냈다. 투쟁에 참여한 김재광은 “유가족이 홀로했던 것은 회사 측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대책위와 늘 상의했

고, 결국 대책위 전체의 의견에 따라준 것” (인터뷰)이라고 회고했다.

이후 삼성의 백혈병 피해를 세상에 알린 황유미의 유가족 황상기(아버지)의 싸움이 있었고 황상기 유가족은 유가족-활동가로서 10여 년간 삼성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본 연구가 산재 유가족운동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산업재해 피해자가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과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다. 오랫동안 산재 유가족은 회사 측의 가장 처음의 회유 대상이면서 합의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법적 책임과 사회적 발언이 금지되었다. 산재 유가족은 거대 회사와 고립된 개인의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사적합의’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는 회사 측의 산재은폐의 시도가 폭로되는 과정이자, 피해의 범주가 개인에서 동료 노동자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등장할 때 필요한 충분조건으로서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유가족의 결기와 결의가 사회적으로 조명되는 만큼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현장 동료들의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유가족을 피해자화하는 또 다른 잘못된 시선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유가족은 주체로 나설 때조차 영웅화된 희생양으로서 굴절되기 쉽다. 그러나 싸움의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역량과 만나지 못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란 단편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운동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유가족의 활동과 목소리의 결이 달라지며, 유가족의 활동에 따라 투쟁의 양상이 변화한다. 이러한 관계성에 기반한 유가족운동의 의미를, 전체 노동자 건강권 싸움의 과정에 ‘위치’ 지우고자 했다.

셋째, 원인규명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활동, 진상규명 활동의 중요성이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기술적이고 표면적인 원인에 국한되고 이에 대한 해결과정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유가족과 결합한 산재투쟁은 구조적인 원인규명과 사고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산재사고는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2.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해 인터뷰, 문헌조사, 언론 기사 검색과 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2장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의 연구 방법은 해당 장의 설명을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3장 유가족운동과 진상조사보고서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개된 14건의 사건과 이로부터 작성된 19건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유가족, 동료, 노동조합, 사회단체의 대응과 보고서 작성 이후 주체들의 역할과 대응을 정리했으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언론 기사와 유가족,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보충했다.

3. 연구의 한계 및 이후 과제

본 연구는 산재 유가족운동의 전부를 담고 있지 못하다. 2000년 이후 언론에 등장한 산재 유가족의 사례 조사와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긴 14건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이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하 〈다시는〉) 활동으로 모아지는 유가족운동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전사일 것이다. 동시에 〈다시는〉에 왜 하필이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 님 아버지 황상기 님, 어머니 박상옥 님, 뇌종양이 발병한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한혜경 님과 어머니 김시녀 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님, 어머니 박정숙 님, 분당 토다이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 군의 아버지 김용만 님, CJ 진천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군의 어머니 강석경 님, LG유플러스 하청업체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양의 아버지 홍순성 님, LG유플러스 하청업체 노동자 고 이문수 님 아버지 이종민 님, tvN 드라마 PD 고 이한빛 님의 아버지 이용관 님(〈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과 동생 이한솔 님(〈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수원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님 등이 모였는지, 왜 하필이면 2019년에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발생적 기원을 기록하고 해석하고자 했다.

처음 연구의 설계는 〈다시는〉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는〉 활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다시는〉 활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연구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유가족운동과 진상조사보고서’ 연구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다시는〉의 활동은 또

다른 커다란 줄기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현장실습생사고 유가족들의 모임,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삼성백혈병 대응 과정에서 모인 가족과 피해자들과 함께한 〈반올림〉, 구광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모임 등의 활동이 연구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함께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그리고 ‘동료’들의 이야기들이 축소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전제하고 〈다시는〉의 활동을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시는〉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활동에서 전제되거나 연관된 활동들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의 부족함과 한계 역시 후속 연구 과제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부족하나마 산재 유가족들의 오래고 질긴 싸움과 삶에 이 보고서를 드린다.

II.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1. 왜 산재 유가족운동인가?

“한빛이 기억한다는 게, 한빛이만 그리워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가의 문제였다. 엄마로서 측은하고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피해자 운동의 주체로, 내 아들의 죽음을 넘어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고 이한빛 노동자 어머니 김혜영)¹⁾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유례없는 관심을 보였다. 일하다 죽은 노동자 중 몇 명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변화를 요구했다. 변화 요구는 2016년 구의역 사고를 기점으로 입법화되기 시작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구의역 사고재발방지법(2016)²⁾,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구의역재발방지법(위험의외주화 방지법)(2017)³⁾,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17) 등이 그것이다. 잠들어있던 입법안과 대안들은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논의·입법되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28년 만에 전면개정되었고,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했지만, 이 시기 국회보다 더 본격화된 것은 십수년간 이어진 노동자 건강과 안전 관련 논의 및 대안에 대한 사회화, 그것과

1) “이한빛PD 5주기 ” 남은 이의 책무,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 미디어오늘. 2021.10.27.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안(산업안전보건법 제정안) 제정안
3) 위험의외주화 금지 패키지 7법.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상 이인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학영 의원)

함께 구성된 사회운동이었다.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운동은 노동자의 죽음을 ‘경제발전의 부차적 결과물이자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사회 인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의 시작이었다. 전환의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있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해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산업재해피해 노동자들의 가족들이었다.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을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와 사고조사위원회, 그리고 사회운동을 끌어갈 동력을 만드는 중심에 ‘산재 유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노동자 건강과 안전 관련 거대한 전환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산재 유가족’에 주목하고자 한다. 매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에서 산재 유가족은 늘 존재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산재 유가족은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묻으려는 회사와 무관심한 정부·사회 속에서 느낀 좌절을 딛고 사망한 가족의 유지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고 거리로 나섰다. 산재 유가족은 혼자가 아니었다. 시민사회, 노동조합, 언론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이 뭉쳐서 앞서 말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산재 유가족운동’이라 지칭한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운동의 덩어리 속에 ‘산재 유가족의 사회적 활동’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 주체가 만들어낸 ‘운동’에서 산재 유가족이 주요한 주체임을 말하기 위함이다.

‘산재 유가족’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임에도 산재 유가족의 사회적 활동을 정리하고, 그것을 ‘산재 유가족운동’ 측면에서 파악하는 일은 다양한 논의와 엄밀한 정의가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위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유가족의 사회적 활동이 드러난 사건들을 정리하고, 산재 유가족운동의 통시적 경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점에서 산재 유가족운동이 무엇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간 산재 유가족의 사회적 활동 양상과 변화, 사회운동 속 산재 유가족의 주체적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다수의 산재 유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필요했다. 삼성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활동,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 모임, 과로사(자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 모임, 쿠팡 피해노동자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한 활동, 최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하 <다시는>)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재 유가족 활동이 존재하지만, 산재 유가족 대부분은 회사의 합의 대상이자 사회적 약자로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산재사망의 경우 때로는 침묵과 비가시화가 드러내는 것이 있다. 즉, 최근 산재 유가족의 역할과 가시화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시화되지 않은 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을 ‘정당하게 기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커졌고, 산재 유가족들의 역할이 운동에 집중된 것은 2018년 이후였다. 그 이전에 있었던 유가족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산재 유가족운동이 드러나는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현재와 유사한 운동 형태 -'진상규명'을 전면에 내걸고 노동조합·시민대책위가 주체적으로 투쟁에 참여하는 방식- 가 시작된 계기를 '이상관 투쟁'(2000)으로 잡고, 그 시기부터 발생한 산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기록하고자 했다. 다만, 산재피해노동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 자체이자 산재 유가족운동의 한 측면인 삼성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가족들 사례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사회운동에 끼친 다층적인 영향이 있어 사례 대부분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재 유가족운동’이라는 범주에서만 해석하기 위해 두 사례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현재 진행형인 산재 유가족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역할 증대를 주요한 연구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운동 영역 내 여러 주체와의 연계 속에서 ‘산재 유가족’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고 이한빛 노동자의 어머니 김혜영의 말처럼 오랫동안 산재 유가족들은 존재하였으나 인식되지 않거나, 회사 측과의 합의 대상인 불운한 피해자로 정의되었다. 사회운동 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의견들이 존재하고 검토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는 변화를 만들어낸 주체로서 산재 유가족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산재 유가족의 연대와 주체적 역할에 주목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았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산재 유가족의 행위와 역할의 변화를 확인하고, 산재 유가족이 노동자 건강권 운동 속에서 산업재해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한 주체로서 등장하는 경향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산재 유가족운동’이라 칭한 유가족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운동 내 다양한 주체와의 연결과 확대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4) 해당 사례는 삼성백혈병 투쟁에서 가장 알려진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가 황유미 1주기 기자회견에 나선 사례와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사망 유가족이 집단적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 2008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설비엔지니어의 부인 정혜정의 사례다.

2.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 통시적 경향 분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가족이란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은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존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대중이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행위”로 “노동 운동, 농촌 운동, 학생 운동, 혁명 운동 따위가 있다.”라고 정의된다. 사전적 의미들을 종합하여 정의하자면 산재 유가족운동이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남은 가족이 산업재해라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산재 유가족운동을 지칭하고자 한다. 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이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과 함께 대책위 및 진상조사위 등의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며, 해당 사건을 넘어 산업재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유가족들의 운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와 그의 어머니 김미숙 등이 있다. 연구 대상을 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으로 한정할 경우, 과거 사회적 조건 속에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산재 유가족들의 행동을 드러낼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의 조건을 모두 따르지 않지만, 산재 유가족이 회사와 사회의 압박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한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일반적 의미의 ‘산재 유가족운동’은 ‘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행위가 다른 운동의 주체들과 연대하거나 집단화된 형태로 산업재해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닐지라도, 산업재해(산재사망) 문제를 기업 내에서 사적 합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산재 유가족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

본 연구는 광의의 산재 유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산재 유가족운동을 통시적

5) 이러한 기준으로 사적 합의의 수준을 넘어서지만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한정적인 공간 속에서의 여러 행위, 즉 타 영역과의 연대 등이 없는 재판과 근로복지공단 판단만이 알려진 사례의 경우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으로 정리하기 위해 신문 기사를 주요한 수단으로 정하였다.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정보를 국가가 제대로 정리한 공적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족의 상황까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에 기록된 산재 유가족들의 발언과 모습이 산재 유가족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적으로 남긴 유일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신문 기사로 보도된 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 정리, 분석하였다.

1) 연구방법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통해 200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4개 전국·지역일간지 및 방송사⁶⁾ 기사에서 “유족”이란 단어를 필수로 포함하며, ‘산재, 일하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인부, 노동자, 근로자, 작업자’ 중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14,191건 중, 연구자가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라고 생각한 178건(1건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1건으로 처리)을 정리하였다.⁷⁾ 덧붙여, 검색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알고 있는 사망사건 기사는 별도로 검색하여 추가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178건은 산재 유가족의 농성, 기자회견, 유족 인터뷰, 노동조합 및 대책위를 통해 입장 전달 등을 한 기사들이며, 사망노동자가 꼭 산재보험 및 직역연금, 타 보험 등에서 정의하는 산재사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과 관련된 사망이라고 연구자가 판단한 사례 모두를 포함하였다. 유족 인터뷰는 단독 인터뷰 외에도 언론사가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연구자의 판단으로 유족 인터뷰(직접인용)가 지나치게 짧거나 사회운동으로서의 경향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제외하였다. 이외에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의 판결만을 바탕으로 기사화된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삼성 백혈병 사건은 최초 등장한 두 사례만을 포함하였다.

178건의 사례는 재해자 사망일, 언론보도일, 지역, 재해자명, 원청기업명,

-
- 6) 전국일간지 11개(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지역일간지 28개(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 방송사 5개(KBS, MBC, OBS, SBS, YTN)
- 7) 키워드의 제한과 연구자가 직접 기사를 확인하는 방법 상의 문제로 인해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빅카인즈에 검색되는 44개 언론사 외 인터넷언론이나 뉴스통신사 등의 기사가 제외되어 있어 아주 제한적인 자료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하청기업명, 직업, 고용형태, 성별, 사고대응의 단위의 범위, 주요 요구사항, 재해유형, 주요 참여유가족, 사건종결 후 추모유무, 기타 등 총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직접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각 항목의 정보값은 빅카인즈에 최초로 해당 사례가 등장한 기사를 중심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추가 검색을 통해 연구자가 기입하였다.

사례별 세부 기입은 연구자가 빅카인즈에서 검색한 기사에 적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되 별도 검색을 통해 보정하였다. 언론보도일은 빅카인즈에 최초 검색된 기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망일과 차이가 큰 경우 보정하였다. 최초 보도일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판단하여 연도만 기입하였다. 재해자명과 기업명은 추가 검색으로 가능한 해당 재해자명과 기업명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의 경우 ‘산업+노동자’ 형식으로 정리하되 기사에서 직업을 자세히 적시한 경우 세부 직업을 서술하도록 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명시된 경우를 따르되 일용직(건설 등), 특수고용노동자(근로자성이 있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 하청 노동자(비정규직으로 분류)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다수의 사망 사건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났을 땐 기타로 분류하였다. 사고대응 단위의 범위는 유가족만 등장한 경우 ‘유가족 참여’로, 노동조합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대책위 등이 구성되거나 대책위를 통해 산재 유가족의 행위가 이뤄진 경우 ‘대책위 구성’으로 분류했다. 유가족 요구사항의 경우 ‘진상규명, 산재승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있는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연구자가 빅카인즈 기사 검색과 추가 검색을 통해 채워넣었다. 재해유형의 경우 사고성 재해, 질병 사망, (과로)자살, 과로사, 기타로 분류하였다. 주요 참여유가족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자식, 배우자, 기타로 분류하되, 참여 유가족이 다수인 경우 해당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가족으로 기입하되 최대한 참여한 유가족과 관계,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시하였다. 추모 여부의 경우 사건 종료 이후 정기적인 추모제 유무에 따라 해당없음, 추모조형물 설치, 단체 설립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산재 유가족운동 정리 항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사망일	해당 날짜	
언론보도일	빅카인즈 및 기타 검색을 통해 확인한 최초보도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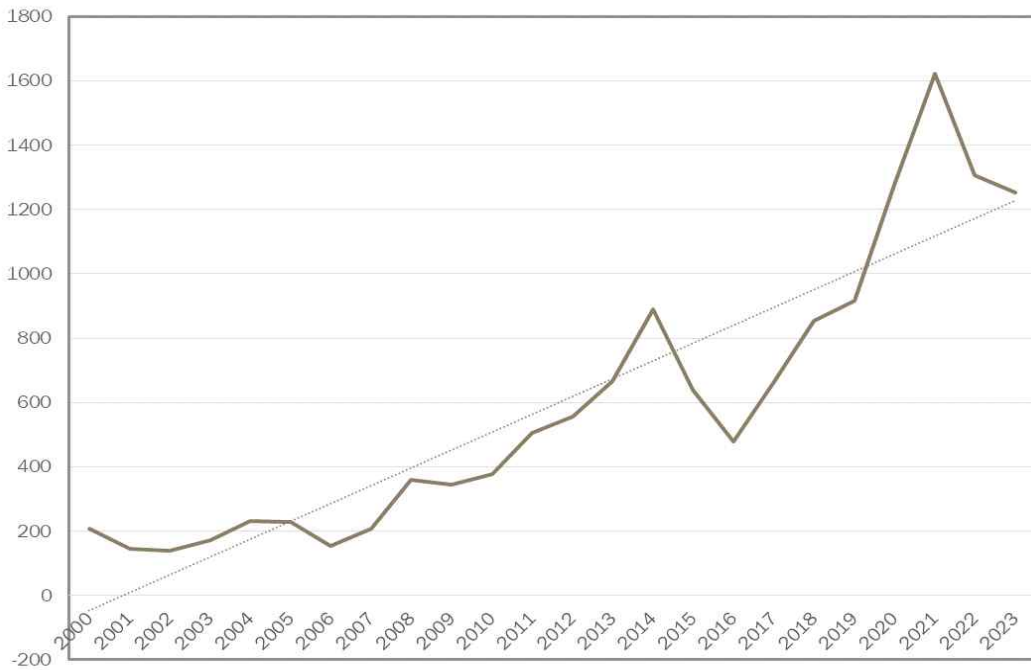
지역	광역시도	
재해자명	최대한 실명 기입 원칙, 다수 사망의 경우 명수 기재	
원청기업명	최대한 원청기업명 기입 원칙	
하청기업명	사망노동자 근무 하청기업명을 원칙으로 하되 다단계 혹은 사업자간 계약 형태의 경우 명시된 기업기입 (하청은 아니더라도 지역사업소가 명시된 경우 해당 내용삽입)	
직업	적시된 직업명 및 산업+노동자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해당없음, 기타 (다수 사망, 다수 고용형태) 알수없음	
성별	기사에 기입된 정보	
사고대응 단위의 범위	유가족 참여,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참여, 대책위 구성	
주요 요구사항	진상규명, 산재승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있는 보상, 재발대책 마련	
재해유형	사고성 재해, 질병 사망, (과로)자살, 과로사, 기타	
주요 참여유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식, 배우자, 기타	
추모 관련	추모제, 추모조형물 설치, 단체 설립, 해당없음 (추모제+추모조형물 설치의 경우 더 상위항목 체크 (추모조형물설치)	
기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내용 별도 기입	

2)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 : 시기별 특성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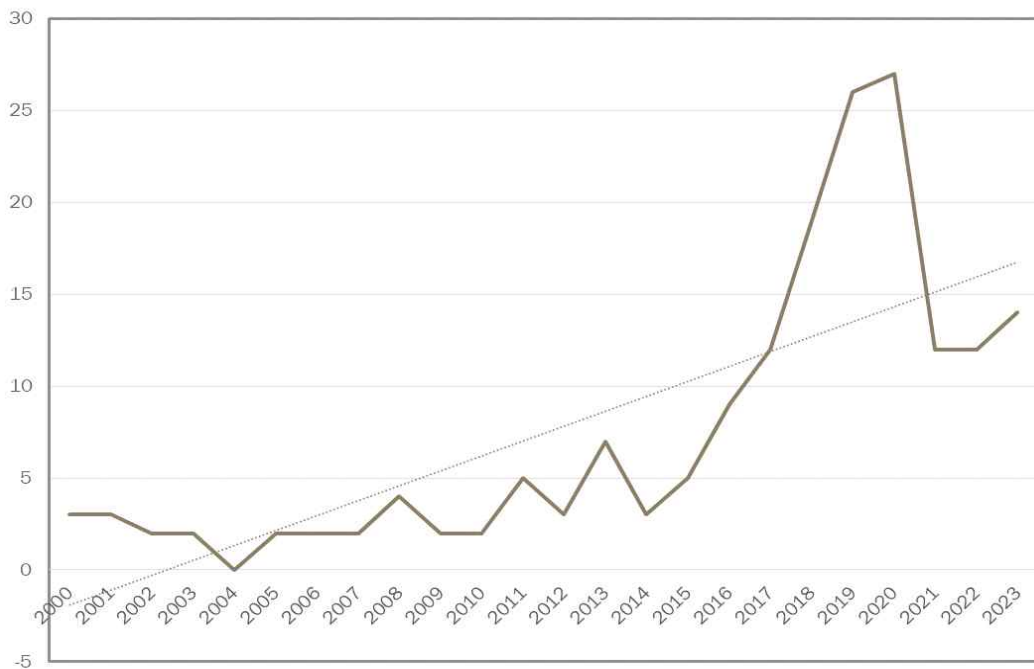
산재 유가족을 다룬 기사는 2000년 208건에서 2023년 1,254건으로 증가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에는 1,62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⁸⁾ 역시 2000년 3건에서 2023년 14건으로 증가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전 연도인 2020년에 2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언론보도 빈도와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라는 한정된 데이터이지만, 아래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재 유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났으며 2020~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면에서 절정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언론기사 빈도 추이

8)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의 연도별 분류의 경우 재해발생일이나 노동자 사망일이 아닌 언론 보도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까닭은 산재 유가족들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가족들이 사회에 나선 시점을 살피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표 3〉 연도별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 추이



산재사망 이후 유가족들의 사회운동 결합도와 산재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뚜렷한 증가세 속에서 산재 유가족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본 연구는 산재 유가족운동의 경향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고민하였다.

첫째, 유가족들은 누구와 어떻게 연대했는가? 사회운동의 사전적 의미에서 거론하였듯이 운동이란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산재 유가족들이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여 대처해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 이외에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대응도 분명히 존재하나, 산재 유가족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협력했는지, 대책위원회나 정부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는가에 따라 산재 유가족운동의 경향성을 살필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산재 유가족들이 어떤 대상을 상대로 무엇을 요구했는가?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운동을 정의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산재 유가족운동이라 하였을 때 산재 유가족들의 요구 대상은 개별기업, 해당업종 전체, 지역, 정부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요구 내용 역시 사망한 해당 노동자에 대한 요구부터 해당 업종 및 법과 정책 변화까지 확대될 수 있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산재 유가족운동의 요구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첫째와 둘째 과정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유가족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산재 유가족운동이라 하였을 때, 산재 유가족들이 가족의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 혹은 사회운동으로써 산업재해 문제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산재 유가족운동의 경향을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다. 언론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만큼 산재 유가족과 그와 함께하는 대응 단위의 전반적 역할을 두루 살펴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렇지만 가족이 일하다 사망하였어도 여전히 나서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드러나기를 택한 산재 유가족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산업재해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 내 산재 유가족의 주체적 등장과 역할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산재 유가족운동을 총 3개의 시기로 분절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시기를 나누는 것이 산재 유가족운동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산재 유가족운동에 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일부 알려진 산재사망 사고들이 개별적으로 정리되어있는 상황에서 산재 유가족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특히 산재 유가족운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산업재해와 관련된 운동이

특정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시기를 분절하여 운동의 특성을 정리하는 작업이 충분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시기별 특성이 해당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1기의 특성이 2기와 3기에 이어지기도 하며, 3기의 특성이 1기와 2기에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해당 시기의 특성은 해당 시기에 가장 잘 두드러졌거나 잘 드러난 특성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표 4〉 산재 유가족운동의 시기별 특성

구분	연대의 범위	주요 요구	유가족 주요역할
1기 (2000-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단독 혹은 해당 사건의 노동조합, 지역 시민사회 지역언론 중심보도 	해당 사건에 대한 산재승인 및 책임 있는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족’이라는 묶음으로 요구사항을 가진 불운한 익명의 주체로 등장
2기 (2008-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사업장 유가족들의 연대 및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단위들의 상설체 구성 	보상과 인정 외 책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산재노동자 추모 등 다층적 요구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굴을 드러내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촉구 및 연대체의 핵심 구성원(반올림)
3기 (2016-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책위원회 구성의 증대와 정부 등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산업재해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연대체 구성에 따른 상시적 연대가능성 증대 	공적 차원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과 사과의 범위 확대,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 설립, 집단적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 유가족들의 조직화 및 단체 설립 활동가로서 산재 문제 이외에도 연대활동

① 산재 유가족운동 1기(2000 - 2007) : 가족의 산재사망이란 재난에 직면한 익명의 피해자인 동시에 보상의 수급자

산재 유가족운동 1기(이하 1기)라 부른 시기는 2000년부터 2007년이다. 이 시기에 발생한 산재사망 사건 중 본 연구가 산재 유가족운동의 사례로 찾은 것은 총 16건이다. 1기는 2000년부터 고 황유미 노동자의 아버지 황상기의 본격적인 등장(2008년) 이전까지로 설정하였다. 1기 주요 산재 유가족으로는 한국타이어 고 조동권 노동자의 아버지 조호영, 고 최성규 노동자의 아버지 최은배가 있다. 이 시기 산재 유가족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며, 산재 유가족운동이라 부를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사건도 드물었지만, 죽은 가족을 위해 나선 산재 유가족들이 존재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산재 유가족운동의 사례로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

〈표 5〉 산재 유가족운동 1기 사례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 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 상 규 명	산 재 승 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 가 및 비고	추 모
2000. 03.29	2000. 04.01	충청	송모씨	동일패브 릭		제조 업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과로사	기타	미명시	X
2000. 06.20	2000. 06.28	경상	최인원	효성		제조 업	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X	X	0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X
2000. 07.31	2000. 08.25	경상	송씨	신세계백 화점	대전	건설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과로사	기타	동생	X
2001. 02.27	2001. 03.13	경상	양모씨	대우조선		조선 업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 여	X	X	0	X	0	사고성 재해	엄마		X
2001. 03.24	2001. 05.08	서울	채희수	관악소방 서		소방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X
2001. 10.25	2001. 11.03	경상	양모씨	삼성테크 윈		제조 업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 여	X	0	X	X	X	과로사	기타	미명시	X
2002. 02.08	2002. 02.23	경상	송모씨	센트랄		제조 업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 여	X	0	X	X	X	과로사	기타	미명시	X
2002. 10.13	2002. 10.21	전라	양모씨	금호건설		건설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질병	기타	미명시	X
2002. 11.18	2003. 01.29	전라	김귀경	대림산업		간호	정규직	여	유가족 참여	X	0	X	X	X	질병	기타	미명시	X
2003. 03.25	2003. 04.07	경기	유모씨	S제지		제조 업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X
2005. 07.05	2005. 07.13	경기	유모씨	두산중공 업		건설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 여	X	0	X	X	X	질병	기타	미명시	X
2005. 04.00	2005. 07.23	전라	박모씨	광양제철		건설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질병	기타	미명시	X
2006. 08.19	2006. 08.23	경상	이모씨	S&T중공 업		제조 업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 여	X	0	0	0	X	과로사	기타	미명시	X
2006. 11.09	2006. 11.14	충청	K씨	한국농촌 공사	H수중	알 수 없음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기타	기타	미명시	X
2007. 02.22	2007. 03.13	경상	정동화	오리엔탈 정공	성진 기업	제조 업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 여	X	0	X	0	X	과로사	기타	미명시	X
2007. 05.29	2007. 11.07	대전	최성규	한국타이 어		사무 직	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X	0	과로사	아빠	최은배	X

1기의 16건의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산재 유가족의 등장 자체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1년 평균 약 두 개

의 사건에 산재 유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해당 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총 19,937명으로 연평균 2,492명에 달한다. 천 건이 넘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나야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 한 건이 등장하는 것이다. 산재 유가족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외 이 시기의 특징은 주로 질병이나 과로사 중심의 사망사건⁹⁾에 대응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지역 중심으로, 유가족 단독 혹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결합하여 산재사망에 대해 대응했다는 점이다. 총 16건의 사례 중 재해경위를 알 수 없는 1건을 제외하고 총 11건의 사례가 과로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한국 산재사망에서 사고성 재해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과 이후 주요한 산재 유가족이 등장한 사망사건들의 재해경위가 사고성 재해와 과로사살이라는 점에서 대조되는 독특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대다수 산재 유가족들은 지방의 대형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더불어 고용형태에서는 16건 중 10건이 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으로, 2기와 3기 사망노동자 중에선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다는 점에서 다른 경향을 보인다.

산재 유가족의 등장 자체가 드물다는 사실, 과로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 지방의 대형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였다는 점은 유가족의 주요한 요구와 연대대상 그리고 역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기 유가족들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유가족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그마저도 주요한 활동은 2008년에 본격화된다. 또 4건(동생, 엄마, 배우자, 아빠)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족’으로 지칭될 뿐 사망한 노동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다. 이 당시 산재 유가족은 주로 익명의 유가족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와 언론이 산재 유가족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으며, 산재 유가족의 역할이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사례를 보도한 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익명으로 유족이 등장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유가족들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경우 유가족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유가족이 함께 행동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동일패브릭에서 사망한 고

9) 이 시기 질병과 과로사이 산재 유가족운동의 주요한 사례로 나타난 것은 노동조합이 개입한 여러 사례를 보았을 때 가설적으로 199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변화에 대한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송모씨 유가족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 사례는 사망노동자가 근무한 옥천군 소재 동일패브릭으로 유가족이 집단으로 찾아가 회사 정문 앞에 송씨의 빈소를 차린 사건이다. 연대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가족뿐이다. 이 시기 다수의 사례에서 유가족이 회사 혹은 빈소에서 집단으로 농성을 진행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유가족 중 상징적인 누군가가 나서기보다 ‘유가족 전체’로 합쳐져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노동조합이 있거나 지역 내 관련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 유가족이 직접 등장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가 해당 유가족과 함께 농성하면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대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2001년 대우조선에서 양모씨가 사망했을 때 주요하게 나타난다.

산재 유가족들이 익명으로도 등장하기 매우 어려웠던 1기에는 산재 유가족운동 자체가 거의 없거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매우 낮았다. 유가족들이 겪었을 어려움은 16건의 사례 전반에서 나타나는데, 1기 산재 유가족들은 언론 인터뷰보다 유가족들의 집단 농성이나 노동조합·노동단체의 집단적 행동과 연계된 보도에서 주요하게 등장한다. 이는 지금보다 훨씬 산재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강도 높은 직접 행동에 나서야만 언론에 조금이나마 다뤄질 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마저 보도가 이루어진 기사도 모두 지역 언론사로, 산재 사망이 해당 사업장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만 다뤄지는 문제로 치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재사망 이후 유가족들의 등장과 연대대상, 유가족의 역할들은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이 시기 유가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산재승인’과 ‘회사의 책임 있는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효성에서 사망한 사건의 경우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효성, 대우조선과 같은 대형 사업장에선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사례도 일부 있다. 그러나 1기 유가족들은 과로사 혹은 질병이라는 사망 경위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라며 산재승인 관련된 사안을 회사에 요구하거나, 사망사건에 대한 민사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금보다 엄격한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절차, 사망노동자가 남성생계부양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가 산재사망을 겪은 유가족과 사망한 노동자의 동료들에게 해줄 수 있다고 여긴 부분이 보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유가족들의 요구와 역할·

활동을 규정한 가장 강력한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이야기는 산재 유가족운동의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 시기 산재 유가족들이 겪는 명시적인 어려움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다.

2003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 대구-포항 고속도로 목성교 가설공사 현장에 서 5명의 노동자가 20M 높이의 공중에서 추락했다. 토목기사 이재훈, 작업인부 안효준, 변정구, 박창규 4명이 숨졌고, 작업인부 배한철이 중상을 입었다. 시공업체는 LG건설이었고, 하청업체는 일양토건이었다.¹⁰⁾ 이 사건은 산재 유가족운동 1기 시기에 벌어진 유가족이 등장하는 가장 큰 사고이자 해당시기 거의 유일하게 산재 유가족의 이름이 드러난 사고였다.

영천 푸른솔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변씨의 어머니 김용희(56.대구 달성군 논공읍)씨는 장례식장 바닥에 드러누운 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 가슴이 찢어진다"며 "내 아들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아버지 변영태(58)씨는 "가난 속에도 내색하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벌며 공부한 착한 아들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등산을 하다 아들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영안실로 달려온 안씨의 아버지 안병욱(55.대구 북구 침산동)씨도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어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부추겼는데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다"고 울부짖었다.

밤늦게 영천 영대병원 영안실에 도착한 숨진 박씨의 어머니 공경자(44.대구 달성군 옥포면)씨는 "아들이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말리지 못한 내가 죄인이다"며 영정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다.

결혼한 지 한달 만에 신랑 이재훈(29)씨를 잃은 아내 오영주(26. 영천시 망정동)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해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산재 유가족들의 오열과 눈시울, 그리고 자책으로 가득 찬 언론보도에는 산재와 산재 유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사 속 산재 유가족들은 산재사망이라는 급작스러운 사고에 직면한 피해자로서 강하게 등장하며, 이를 통해 이

10) “고속도로 공사장 인부 4명 추락사” 매일신문. 2003.02.07
 지금도 볼 수 없는 사고경위, 재해장소, 원하청명과 위반사항, 피해노동자들의 이름과 거주지, 연령, 회사입장, 수사중인 형사의 멘트 그리고 사망노동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인터뷰까지 들어있는 기사로, 사건 직후 보도된 정보성 기사 중 가장 좋은 기사이다. 서종일, 김진만, 최창희 기자

시기 사회와 언론에서 산재 유가족을 정의한 방식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가족들의 인터뷰 인용과 묘사와 더불어 해당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적혀있다.

“시공업체인 LG건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있고 사고를 낸 하청업체인 일양토건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문제는 사고원인이 밝혀진 뒤 다뤄질 전망이다.”

사고 경위와 관련 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뒤 당연히 보상 문제를 언급한 기사 내용은 산재사망 문제에서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피해보상’임을 보여준다. 산재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너무나 명확한 사고성 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처로 ‘재해보상’이 기업과 사회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망한 노동자가 유수의 대기업과 큰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여부가 기사에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당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산재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미가입으로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위 사고 기사를 통해 1기 산재 유가족운동의 사례들이 왜 산재 유가족운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1기 산재 유가족운동의 사례는 앞서 사전적 의미의 산재 유가족운동 중 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의 범주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일 수 있다. 몇 사례를 제외하면 사회 전반의 집단적인 움직임이나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사업장 중심, 해당 사안 중심의 모습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익명의 유가족’이라는 형태는 운동의 행위자로 보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산재 유가족들은 산업재해 문제를 보상 문제로 국한하고, 산재 유가족들은 불운한 피해자로만 묘사하는 사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사망한 가족들을 위해 집단으로 나섰다. 이 사례들은 산업재해 문제에 있어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아주 미약한 영향만을 주었을지 몰라도, 이후 산재 유가족들의 주체적인 역할과 더불어 유가족과 함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해당 문제가 사회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② 산재 유가족운동 2기(2008 - 2015) : 진상규명과 인정, 집단적 대응과

연대의 시작점

산재 유가족운동 2기(이하 2기)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연쇄사망과 삼성백별병 사망사고 대응 과정에서 산재 유가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2008년부터 고향유미 노동자와 그 아버지인 황상기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한 2014년을 지나 구의역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2015년까지를 지칭한다. 이 시기 1기 평균 200여건에 불과하던 관련 기사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한 2014년 천 여건 가까이 늘어났고,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 역시 25건으로 소폭 증가한다. 이는 삼성백혈병 대응 과정에서 등장한 사례들이 제외된 수치로 실제로 이들을 포함한다면 전 시기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가 증가했다.¹¹⁾ 숫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과거 일회적이고 개별 사안에 따른 개별 산재 유가족들의 행위는 지속적이고 같은 사업장 혹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유가족들의 연대하여 대응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또한 피해당사자로서 유가족과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 지역 노동단체 등과 같이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단위 외에도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연단체들이 만들어지며 개별 산재 사망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재 유가족들과 연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1기가 산재 유가족운동의 과도기였다면, 2기에 들어서면서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산재 유가족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산재 유가족의 언론 노출 증가로 우리가 현재 접하는 산재 유가족의 상과 유사한 이미지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산재 유가족운동의 사례로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

<표 6> 산재 유가족운동의 2기 사례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상 규명	산재 승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모 및 비교	추모
2008. 01. 07	2008. 01. 14	경기	40명 사망	코리아냉동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기타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유가족 대표단	해당 없음
2007. 03. 06	2008. 03. 07	경기	황유미	삼성전자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0	0	0	0	0	질병	아빠	미명시(황상기)	단체 설립
2005. 07. 00	2008. 04. 28	경기	황민웅	삼성전자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X	0	X	X	X	질병	배우자	정해정	단체 설립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서론에 서술한 것처럼 해당 운동의 다층적인 요소와 큰 규모 등으로 인해 최초의 제기자 황유미 노동자 사례, 산재 집단신청의 시작 황민웅 사례만을 포함했다.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 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 상 규 명	산 재 승 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 가 및 비고	추 모
2008.05.18	2008.05.20	경상	변우백	두산중공업	미기재	제조업 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X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07.07.27	2009.01.11	충청	이주철	알수없음	S인력회사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질병	자식	아들 이정섭	해당 없음
2009.07.25	2009.07.30	경기	레휘중, 웬총또안	GS건설	미기재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레휘중 동서 루반카	해당 없음
2010.09.07	2010.09.10	충청	김씨	환영철강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추모 조형물 설치
2010.09.07	2010.09.28	강원	허모씨	S사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한모씨	해당 없음
2010.03.18	2011.02.15	충청	신모씨, 진모씨	남광토건	에네스트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0.11.27	2011.06.01	경상	안씨	알수없음	부길건설	화학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자식	안대식	해당 없음
2011.06.09	2011.06.09	충청	박모씨	현대자동차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0	X	(과로) 자살	배우자	미명시	해당 없음
2011.11.21	2011.11.29	경상	ㄱ씨	유압기 생산회사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0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1.12.09	2011.12.12	인천	5명 사망	코레일	코레일테크	철도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2.01.18	2012.02.02	경상	최모씨	STX중공업	영진오션	조선 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X	0	X	X	0	과로사	자식		해당 없음
2012.01.08	2012.03.28	경상	L모씨	N엔리주택 현장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질병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2.04.18	2012.05.25	경상	박희석	한국방송	기획	보조 출연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해당 없음
2013.02.13	2013.02.18	경상	ㄱ씨	중공업 조립공장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고종사 촌형 박모씨	해당 없음
2013.02.07	2013.02.21	경상	전모군	대우조선 해양	미적시	조선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0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3.03.15	2013.03.18	전라	고백중만 외 17명 사상	대림산업	미적시	제조업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3.04.09	2013.04.16	경상	손모씨	부영	페석 제장	제조업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사위 문순현	해당 없음
2013.03.08	2013.06.27	인천	임승현	아모텍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0	X	0	과로사	엄마		해당 없음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상 규명	산재 승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가 및 비교	추모
2013. 10. 16	2013. 10. 29	전라	A씨	동아스틸	정진기업	제조업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3. 10. 17	2013. 11. 12	경기	김모씨	D 종합건설	J건설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강모씨	해당 없음
2014. 02. 06	2014. 02. 14	충청	김동준	CJ		현장 실습생	비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엄마	강석경	추모제
2014. 08. 11	2014. 08. 19	경상	황모씨	대우조선해양	미적시	조선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0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4. 04. 26	2014. 11. 06	울산	정범식	현대중공업	미적시	조선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0	0	X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해당 없음
2012. 07. 00	2015. 02. 01	충청	김영찬	가죽제조회사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질병	배우자	박영선	해당 없음
2014. 04. 16	2015. 07. 12	전라	김초원	안산 단원고		교사	비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X	0	X	X	X	사고성 재해	아빠	김성욱	단체 설립
2015. 07. 29	2015. 08. 20	충청	이모씨	에버코스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X	X	0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미적시	해당 없음
2015. 10. 05	2015. 10. 13	울산	이정욱	현대중공업	미적시	조선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0	0	0	사고성 재해	아빠	이만우	해당 없음
2015. 10. 22	2015. 11. 03	부산	박유정	롯데백화점	아이더	백화점 근무 노동자	비정규직	여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X	X	과로사	기타	오빠 박창언	해당 없음

2기 산재 유가족운동의 변화의 한 모습은 고 이주철 노동자 사례에서 드러난다. 이주노동자이자 건설노동자였던 고 이주철 노동자는 2007년 7월 27일 인력회사를 통해 배치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나지 않아서 쓰러진 후 사망한다. 이주철 노동자의 아들 이정섭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죽음의 이유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아버지 시신을 병원에 안치한 뒤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충청일보에 2009년 1월 11일에 보도된 이 사례는 1기와 유사한 형태로 산재인정을 중심으로 유가족 개인이 활동한 사례이지만, 2기의 특성과 다르게 그다지 ‘큰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 유가족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언론에서 가족의 사건을 직접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¹²⁾ 이는 2012

12) 유가족의 직접적 등장은 유가족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망한 노동자의 구체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1기 이름과 사업장, 연령 등으로 묘사되었던 사망노동자들은 유가족들의 입을 통해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이웃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가족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2011년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돌아오지 않는 강 - 4대강 사망자 19명 전수조사〉 기사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구의역 참사 이후 구체적인 산재노동자

년 사망한 고 박희석 노동자의 사례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유가족의 얼굴과 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한국방송 <각시탈>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박희석 노동자의 아내와 딸이 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산재신청이 어려웠던 박희석의 산재승인을 위해 1인 시위에 나서서 언론에 직접 사건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주철의 경우 건설업의 다단계 하청 문제, 박희석의 경우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고 이주철 노동자의 아들 이정섭과 고 박희석 노동자의 자녀>

이 두 사례에서 산재 유가족은 사망한 자신의 가족의 문제를 사회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 화자로 등장하여 문제를 설명하고,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 유가족들은 산재사망이라는 사고의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주요한 화자로서 등장한다. 산재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산재사망 문제를 직접 파고드는 일종의 ‘탐정’이 된다.

이러한 산재 유가족의 형상은 2014년 사망한 현대중공업 고 정범식 노동자의 사례에서 더욱 부각되고 이 시기 한국타이어, 삼성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의문사” 사례에 대한 집단적 대응에서 더욱 굳혀진다.

2기는 산재 유가족이 문제해결을 위한 화자이자 탐정으로 직접 등장하는 경향이 시작되는 동시에 산업재해 문제가 개별 사업장, 개인, 지역의 수준을 넘어서 전국화된다. 문제의 해결수준과 요구 또한 산업적 차원과 산업재해 전반으로 나아간 시기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사망사고는 한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망과 연계되어 나타나기도 하고(“현대중 하청직 또 숨져… 두달새 7명

의 묘사와 보도가 기초가 된다.

째” . 한겨레신문), “의문사” 라는 형태로 사업장 규모를 넘어 함께 이름 붙인 산재 유가족들의 연대가 일어나기도 한다.(“대기업 의문사 사회적 관심 필요하다” . 경향신문 사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를 비롯한 삼성백혈병 대응, 한국타이어에서 사망한 고 최성규, 조동권 노동자의 아버지 최은배와 조호영 등이 꾸린 대책위 사례이다.



고 최성규, 조동권의 경우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6년 12월 28일 조동권이, 2007년 5월 28일 최성규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둘 외에도 한국타이어에서 1년간 14명의 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최성규와 조동권은 가족대책위(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족 대책위)를 꾸리고 사업장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과 함께 “적절한 보상” 외에도 “죽음에 대한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싸움에 들어갔다.¹³⁾ 중앙언론 등에서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1기 산재사망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던 산재 유가족과 회사 그리고 노동조합, 시민사회,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공동선대본부장인 김근태는 2007년 11월 신탄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방문해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적당히 넘기지 않을 것” 이라 발언했고, 대통합민주신당 내 한국타이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사업장에 방문해 조사활동 등을 하기도 하였다.¹⁴⁾

13) “노동자 집단산재사망 초래, 대규모 산재은폐, 한국타이어 규탄한다” . 산재은폐와 노동자 집단 산재사망의 주범 한국타이어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7.12.13.

14) 주요 정당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관심은 2007년 9월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이 성명을 통해 알려진 뒤 이미 언론에 많은 노출이 일어난 뒤 방문이었고, 특히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의 사위가 한국타이어 부사장이었기 때문이었다.

한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에 대하여 유가족이 집단으로 대응하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산재사망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6년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등은 가장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발생시킨 기업을 발표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정연대>가 발족했다. 산업재해 영역에서 시민사회 연대체들의 구성은 산재 유가족운동의 대응과 함께 산재사망을 집단적 차원의 문제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앞서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가 주장한 보상 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과 사과, 더 나아가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추모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낸 사례는 2010년 환영철강에서 사망한 고 김아무개씨의 사례이다.

2010년 9월 7일 용광로에 떨어져 사망한 29세 노동자 김아무개씨의 사망사고에서 유가족은 작업자 개인의 과실을 지적하는 회사에 맞서 초기부터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작업장의 열악함을 이야기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활동 외에 주목할 지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추모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추모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면에서 노래와 연극이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제페토 시인의 시 <그 쇳물 쓰지 마라>를 통해 시민들에게 크게 알려졌고, 해당 노동자가 사망한 용광로의 쇳물로 추모조형물을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민주노총, 건강권실현을 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¹⁵⁾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건강연대가 펼쳐온 ‘기업살인운동’이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으며, 산재사망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기업살인법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유가족 혹은 사회의 요구가 1기에서 기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몇몇 단위와의 합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환영철강 사례에서는 사회 전반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추모와 책임자 처벌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후 산재사망 사고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정서’로 파급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 환영철강, 이주철, 박희석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2기 산재 유가족운동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2기를 대표하는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삼성백

15) <‘용광로 청년’은 ‘기업 살인’... 하지만 가해자는 어디에?>. 울산저널. 2010.09.15

혈병 대응 사건이다. ‘자식이 일하다 죽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거대기업과 오랜 시간 싸우는 부모’, ‘일상을 살아가다 자식의 죽음에 직면해 노동조합,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전면에 나선 부모’,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자식의 동료와 또 다른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부모’. 이러한 산재 유가족의 모습은 현재까지 주요하게 이야기되는 산재 유가족의 모습이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 먼저 알려진 유가족이 고 황유미 노동자의 아버지 황상기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여윈 어린 아이들, 형제 자매를 잃은 가족들인 저희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에 사람 냄새, 인간의 존엄성이 움틀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전자산업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싸울 것입니다.” (삼성반도체 고 황유미 6주기 및 제5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추모의 날 황상기 발언)

2008년 이후 산업재해 및 산재 유가족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의 대부분은 삼성백혈병 사망, 특히 얼굴을 드러낸 가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언론 기사 빈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황유미와 황상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을 전후로 황상기의 언론 인터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이전에도 삼성백혈병 피해자와 유족들의 동향이 산재 유가족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삼성백혈병 투쟁에서 등장한 산재(유)가족들은 본 연구에서 3기로 분절한 시기에도 계속되며 산재 유가족, 산재사망노동자 및 산재피해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황상기를 비롯한 삼성 피해노동자 (유)가족들은 가장 널리 알려진 산재 유가족들의 모임인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설립 및 진행 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타이어, 삼성 등 특정 기업의 사망사건에 대한 유가족들의 집단적인 대응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등장. 시민사회 및 전문가·노동조합과의 연대체 구성 등을 통한 진상규명 요청,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산재노동자 추모와 같은 다층적 요구 발생. 그리고 산재 유가족 및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또 다른 주체로서의 정치권의 등장을 2기의 주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2기의 특성은 3기에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며, 기업을 뛰어넘는 산

재 유가족의 연대를 통해 유가족이 사회변화의 본격적 주체로 나아가게 된다.

③ 산재 유가족운동 3기(2016 - 2023) : “전태일도 몰랐는데, 내가 이소
선처럼 싸울 줄이야”

산재 유가족운동 3기(이하 3기)의 시작점을 2016년으로 잡은 것은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참사 때문이다. 구의역 참사는 고 김군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후 여타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못했지만,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 참여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대책위원회 구성과 시민사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진상보고서 발간이라는 3기의 형태가 구축된 사건이다. 다양한 직종, 다양한 양태의 사망사건에서 산재 유가족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및 현장 실습생 유가족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 산재사망 문제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연대 대상이었던 산재 유가족들이 주체적으로 산업재해 문제뿐만 아니라 타 사회문제로의 연대를 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기에 나타났던 다층적 요구들이 구체화되고, 실제 법제도에도 큰 변화를 이뤄내었다.

이 시기 산재 유가족운동의 사례로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

〈표 6〉 산재 유가족운동의 3기 사례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상 규명	산재 승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가 및 비고	추모
2015. 11. 01	2016. 00. 00	부산	이모씨	SK해운	드 해운	조선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과로사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6. 02. 29	2016. 01. 12	전라	A씨	LG생명과학	미 적시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5. 05. 07	2016. 03. 10	경기	김동균	토다이		현장실습생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아빠	김용만	추모 행사
2016. 05. 28	2016. 05. 28	서울	김군	서울메트로	은 성 PSD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사고성 재해	엄마		추모 행사
2016. 06. 01	2016. 06. 01	경기	윤모씨	포스코건설	매 일 ENC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0	0	X	사고성 재해	자식	배우자	해당 없음
2016. 8. 25	2016. 06. 09	경기	김모씨	다산종합관리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여	유가족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 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 상 규 명	산 재 승 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 가 및 비 고	추 모
2016. 06.09	2016. 08.31	전라	황모씨	한국버스 프(주)	미 적 시	제 조 업 노 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적시	해당 없음
2016. 10.26	2016. 10.26	서울	이한빛	TVN		방 송 사 피 디 편 의 판 매 노 동자	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0	0	(과로) 자살	엄마	아빠, 동생	단체 설립
2016. 12.14	2016. 12.15	경상	김모씨	BGF리 테 일		점 판 매 노 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X	0	0	0	0	사고성 재해	엄마		해당 없음
2014. 10.20	2017. 00.00	전라	이문수	LG유플러 스	씨 에 스 파 터 너 트너	콜 센 터 노 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아빠	이종민	해당 없음
2017. 01.22	2017. 00.00	전라	홍수연	LG유플러 스	LB 휴 넷	동 자 (현장 실 습 생)	비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아빠	아버지 홍순성	추모 행사
2015. 12.08	2017. 03.13	인천	이상목	인천 한 공사장		건 설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0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매형	해당 없음
2017. 05.01	2017. 05.01	경상	6명 사망	삼성중공 업	미 적 시	조 선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0	0	사고성 재해	기타	미적시	해당 없음
2017. 06.17	2017. 06.28	경상	이모씨	삼성중공 업		조 선 노 동 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과로) 자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7. 08.01	2017. 08.17	부산	이현준	마사회		마 필 관 리 사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X	0	0	(과로) 자살	아빠	엄마	해당 없음
2017. 08.21	2017. 08.21	경상	4명 사망	STX조선 해양		조 선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적시	해당 없음
2017. 08.27	2017. 08.27	부산	권영모	부산 남 구청		청 소 노 동 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과로사	아빠		해당 없음
2017. 09.05	2017. 09.05	전라	이길연	우정사업 본부	서 광 주 우 체국	집 배 노 동 자	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자식	아들 이동하	해당 없음
2016. 01.00	2017. 10.10	기타	김인환(가)	지방 건 설사		건 설 노 동 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과로사	배우자	아내 이서경(가)	해당 없음
2017. 11.19	2017. 11.22	제주	이민호	제이크리 에이션		현 장 실 습 생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0	0	사고성 재해	아빠		단체 설립
2017. 12.14	2017. 12.15	서울	전모씨	코레일	미 명 시	건 설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X	X	0	사고성 재해	엄마	이모씨	해당 없음
2018. 01.25	2018. 01.28	경상	4명 사망	포스코	TTC한 진	정 비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0	0	사고성 재해	기타	유가족 대표	해당 없음
2018. 01.28	2018. 01.31	전라	정모씨	H건설	자 회 사 미 명시	건 설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정씨	해당 없음
2018. 02.15	2018. 02.19	서울	박선옥	서울아산 병원		간 호 노 동 자	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0	0	0	X	0	(과로) 자살	기타	미명시	추모 행사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 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 상 규 명	산 재 승 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 가 및 비고	추 모
2018. 03.02	2018. 03.02	부산	4명 사망	포스코건설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해당 없음
2018. 03.28	2018. 03.30	경기	이모씨	이마트	미명시	정비 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0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동생, 외삼촌	해당 없음
2018. 01.03	2018. 04.05	서울	장민순	에스티유 니타스		웹디 자이너	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기타	언니 장항미	해당 없음
2019. 05.19	2018. 05.19	충청	4명 사망	한국도로 공사	대전 한건설 업체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해당 없음
2018. 05.29	2018. 06.01	대전	3명 사망	한화 대 전공장		제조 업 노동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0	X	0	사고성 재해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해당 없음
2018. 07.17	2018. 08.21	경상	5명 사망	해군		군인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박재우 고모	추모 행사
2018. 08.21	2018. 09.02	인천	9명 사망	세일전자		제조 업 노동자	기타	기타	유가족 참여	0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6. 10.24	2018. 10.19	대구	2명 사망	대구환경 공단		유지 보수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8. 10.08	2018. 10.21	대전	유모씨	CJ대 한통 운		물류 센터 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X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8. 10.20	2018. 10.21	제주	김모씨	제주도개 발공사		제조 업 노동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0	0	사고성 재해	배우자		해당 없음
2018. 04.17	2018. 10.22	경상	A씨	자동차부 품 제조 업체		제조 업 노동자	알 수 없음	남	유가족 참여	0	0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8. 10.19	2018. 10.25	경상	권모씨	창녕 공 사현장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8. 10.02	2018. 11.14	인천	송모씨	한국GM	택 위 택 회사	송 택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해당 없음
2018. 08.12	2018. 12.08	충청	김종길	청주공항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0	X	X	질병	배우자	우종욱	해당 없음
2018. 08.13	2018. 12.11	전라	정수민	대한민국		선 근 예 비 역	알 수 없음	남	유가족 참여	0	0	X	X	X	사고성 재해	엄마		해당 없음
2018. 12.11	2018. 12.21	충청	김용균	서부발전	한 국 발 전 기 술	발 전 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사고성 재해	엄마	아빠	단체 설립
2019. 01.05	2019. 01.05	경기	A씨	화성 한 공장		제조 업 노동자	알 수 없음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9. 01.09	2019. 01.10	서울	임모씨	개인택시		택시 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X	X	0	(과로) 자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 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 상 규 명	산 재 승 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 가 및 비고	추 모
2019.01.04	2019.01.11	서울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노동자	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기타	미명시	추모조형물 설치
2018.12.11	2019.01.12	제주	김모씨	제주국제공항	영역 업체 미 시	경비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과로) 자살	아빠		해당없음
2019.01.11	2019.01.15	제주	A씨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무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과로) 자살	기타	미명시	해당없음
2019.02.02	2019.02.08	경상	A씨	포스코		제조업노동자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0	X	X	X	질병	기타	미명시	해당없음
2019.02.14	2019.02.15	대전	3명사망	한화 대전공장		제조업노동자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X	X	0	사고성 재해	기타	유가족 대표	해당없음
2019.02.14	2019.02.15	충청	A씨	생수 제조공장	영역 업체	제조업노동자	비정규직	여	유가족 참여	X	X	X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없음
2019.02.05	2019.02.22	서울	이모씨	BC카드	협력 업체	IT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과로사	기타	미명시	해당없음
2019.04.10	2019.04.11	경기	김태규	은하종합건설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누나 김도현, 엄마	해당없음
2019.04.08	2019.04.19	경기	이가영	서울반도체		제조업노동자	정규직	여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X	0	질병	기타	미명시	해당없음
2019.05.13	2019.05.15	충청	이은장	우정사업본부	공주 우체 국 자	집배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0	X	0	과로사	기타	형 이재홍	해당없음
2019.06.03	2019.06.17	강원	송현준	한국전력	협력 업체	배전공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0	X	X	사고성 재해	아빠		해당없음
2019.06.19	2019.06.20	충청	강씨	우정사업본부	당진 우체 국 자	집배노동자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X	0	과로사	기타	미명시	해당없음
2019.07.22	2019.07.23	경상	장아무개씨	서진산업	사내 하청	제조업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없음
2019.06.02	2019.07.27	전라	박세진(가)	학교 급식	완주 군 한 초 등 학교	영양교사	정규직	여	유가족 참여	X	0	X	X	X	(과로) 자살	아빠	박정환(가)	해당없음
2019.07.21	2019.07.29	경상	K씨	경남도청		공무원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X	X	0	(과로) 자살	기타	형	해당없음
2019.07.31	2019.07.31	서울	3명 사망	현대건설	협력 업체	건설노동자	기타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0	사고성 재해	기타	구씨 부인 / 안씨 아버지 안종수	해당없음
2019.07.25	2019.08.21	경기	2명 사망 / 허용원	경찰청		경찰관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없음
2019.09.10	2019.09.17	경상	4명 사망	수산물 가공업체		제조업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X	X	0	사고성 재해	자식	팔빈디오의 딸 김지호	해당없음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상 규명	산재 승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가 및 비고	추모
2019. 10. 20	2019. 10. 30	경상	A씨	세노텍	S특수 건설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9. 10. 30	2019. 11. 07	부산	A씨	B건설	협력업체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9. 09. 26	2019. 11. 21	부산	박모씨	한진중공업 / 동우건설	조선업 / 동크레인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아내 강은경 / 어머니	해당 없음
2019. 11. 29	2019. 11. 29	부산	문중원	한국마사회		기수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배우자	아내 오은주	해당 없음
2019. 11. 30	2019. 12. 02	인천	A씨	한국지엠	하청업체	제조업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사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19. 12. 09	2019. 12. 18	경상	ㄱ씨	한국화이바		제조업노동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0	X	X	X	(과로) 자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20. 02. 04	2020. 02. 05	충청	이재학	청주방송 (CJB)		프리랜서 방송 PD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기타	동생 이대로	추모 물 설치
2020. 02. 22	2020. 02. 22	울산	김태균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조선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20. 03. 17	2020. 04. 06	전라	서씨	오리온익산공장		제조업노동자	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아빠		해당 없음
2020. 04. 29	2020. 04. 29	경기	38명	한익스프레스	건우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사고성 재해	기타	다수	추모 행사
2020. 05. 10	2020. 05. 11	서울	최희석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0	X	X	(과로) 자살	기타	큰 형 최희철(가명)	해당 없음
2020. 05. 13	2020. 05. 15	강원	김모씨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제조업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0	X	X	사고성 재해	자식	아들 김수찬	해당 없음
2020. 05. 22	2020. 05. 26	광주	김재순	조선우드		제조업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사고성 재해	아빠	아버지 김선양	추모 행사
2020. 06. 01	2020. 06. 09	충청	박현경	쿠팡		조리노동자	비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0	0	0	0	0	질병	배우자	남편 최동범	해당 없음
2019. 10. 31	2020. 07. 09	부산	정순규	경동건설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0	0	0	0	사고성 재해	자식	아들 정석채	해당 없음
2018. 09. 06	2020. 08. 02	경상	박송희	김천문화회관		성악노동자	비정규직	여	유가족 참여	X	X	0	X	0	사고성 재해	아빠	박원환	해당 없음
2020. 08. 03	2020. 08. 04	경기	문모씨	평택공사현장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0	X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아내, 어머니, 매형	해당 없음
2020. 08. 06	2020. 08. 08	강원	6명 사망	춘천시청	용역업체	건설노동자/공무원	기타	남	유가족 참여	0	0	0	0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 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 상 규 명	산 재 승 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 가 및 비고	추 모
2020. 03.17	2020. 08.19	전라	임균택	LG전자	이 레 터 서 비 스	콜 센 터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0	X	X	(과로) 자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20. 10.08	2020. 10.12	서울	김원중	CJ대 한통 운	송 천 대 리 점	택 배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사	아빠	아버지 김삼영	해당 없음
2020. 10.12	2020. 10.16	경상	장덕준	쿠팡	칠 곡 센 터	류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사	엄마	박미숙 / 아버	추모 행사
2020. 10.12	2020. 10.19	서울	김모씨	한진택배	동 대 문 지 사	택 배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X	0	과로사	기타	동생	해당 없음
2018. 02.28	2020. 10.21	인천	김일두	건설회사	건 설 자	동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과로) 자살	배우자	아내 박소영	해당 없음
2020. 10.19	2020. 10.22	경기	A씨	CJ대 한통 운	콘 지 암 센 터	택 배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사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20. 07.00	2020. 10.22	경기	서모씨	교육청		교사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질병	아빠	서정균	해당 없음
2020. 07.05	2020. 10.26	경상	서형욱	CJ대 한통 운		택 배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사	기타	누나 서형주	해당 없음
2020. 10.27	2020. 10.29	대전	김모씨	한진택배	대 전 미 널	택 배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사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20. 04.00	2020. 11.12	알 수 없 음	고정남	증 장 비 업 체		화 물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0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유족 이경우	해당 없음
2020. 11.23	2020. 11.24	인천	A씨	인천공항 공사	건 설 하 청 업 체	건 설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20. 10.28	2020. 11.30	인천	심장선	남동발전 영흥발전 소	고 려 FA	화 물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X	X	0	사고성 재해	자식	아들 , 형	해당 없음
2020. 12.02	2020. 12.03	경기	A씨	인테리어 회사		건 설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20. 12.05	2020. 12.14	경상	ㄱ씨	제이제이 산업		제 조 업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X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미명시	해당 없음
2020. 12.20	2020. 12.24	경기	속행	알 수 없 음		농 업 노 동 자	비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0	0	0	0	0	질병	기타		해당 없음
2020. 03.19	2021. 00.00	울산	최성호	소방청	헬 리 코 아	헬 기 조 종 사 항 만 하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해당 없음
2020. 04.22	2021. 01.19	경기	이선호	동방		화 물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X	0	사고성 재해	아빠		해당 없음
2020. 04.26	2021. 03.13	세종	장창우	쌍용C&B		화 물 노 동 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0	X	0	사고성 재해	자식		해당 없음
2020. 07.27	2021. 03.22	경기	서울	경기과학 고		교사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X	X	질병	아빠		해당 없음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 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 상 규 명	산 재 승 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 가 및 비고	추 모
2020.09.07	2021.04.27	경기	이찬희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0	X	0	(과로) 자살	배우자		해당 없음
2020.10.12	2021.05.06	서울	김씨	한진택배		택배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X	X	(과로) 자살	기타	미명시 / 노조 산재신청	해당 없음
2020.12.16	2021.06.03	강원	A씨	삼표자원개발		굴삭기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0	0	X	사고성 재해	자식		해당 없음
2021.03.08	2021.07.07	경상	A씨	원자력공장	KCTC	운송업체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해당 없음
2021.06.26	2021.08.29	서울	이씨	서울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여	유가족 참여	0	0	0	X	0	(과로) 자살	배우자		추모 행사
2021.08.06	2021.10.24	서울	이씨	배달의민족		배달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엄마		해당 없음
2021.10.06	2021.10.27	전라	홍정운			장습생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0	X	0	사고성 재해	아빠		해당 없음
2021.10.18	2021.12.06	경상	함씨			재활용업체노동자	알 수 없음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형	해당 없음
2021.10.23	2022.00.00	서울	김씨	SK TNS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동생	해당 없음
2021.11.05	2022.01.04	경기	김다운	한국전력		전기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매형	해당 없음
2021.11.17	2022.01.21	충청	A씨			폐기물처리노동자	알 수 없음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자식	아들	해당 없음
2022.01.11	2022.01.27	광주	9명	현대산업개발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0	X	사고성 재해	기타	가족협의회 / 시민대책위	해당 없음
2022.01.30	2022.02.04	서울	이힘찬	SBS	스튜디오S	방송사피디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0	0	0	0	(과로) 자살	기타	동생 이희	해당 없음
2022.03.21	2022.03.03	경상	이동우	동국제강		크레인수동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0	0	사고성 재해	배우자	어머니	해당 없음
2022.05.16	2022.05.12	경상	박병일	경남도	에어펠리스(지주회사선그룹)	헬기조종사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0	X	X	사고성 재해	아빠		해당 없음
2022.06.14	2022.06.21	인천	전씨	씨제이대 한통운		택배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X	0	0	0	(과로) 자살	배우자		해당 없음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보고서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 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 상 규 명	산 재 승 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 가 및 비고	추 모
2022. 09.26	2022. 07.24	대전	7명	현대백화점그룹		백화점 근무 노동자	비정규직	기타	유가족 참여	X	X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가족협의회 무산	해당 없음
2022. 09.30	2022. 09.30	경기	김신영	화일약품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여	대책위 구성	X	X	0	X	0	사고성 재해	아빠	엄마	해당 없음
2022. 10.15	2022. 11.09	경기	A씨	SPL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X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알 수 없음	해당 없음
2022. 11.07	2022. 11.11	광주	A씨	삼성전자	DK	제조업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형	해당 없음
2023. 01.13	2023. 00.00	광주	정상훈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X	X	사고성 재해	배우자		해당 없음
2023. 03.08	2023. 00.00	서울	이민우	빌딩관리업체		빌딩관리 노동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0	X	0	X	(과로) 자살	배우자		해당 없음
2023. 05.01	2023. 03.13	강원	양희동	건설회사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X	0	(과로) 자살	기타	형	해당 없음
2023. 06.00	2023. 07.12	경상	감여진(가명)	한국세라믹기술원		장애인 체험인턴	비정규직	여	유가족 참여	0	0	X	X	X	질병	엄마	손 위 형제	해당 없음
2023. 06.11	2023. 07.17	광주	마채진	한국건설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X	0	X	X	사고성 재해	자식	딸	해당 없음
2023. 06.19	2023. 07.31	서울	김동호	코스트코		마트 노동자	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0	0	0	X	0	질병	아빠	형	해당 없음
2023. 07.03	2023. 08.14	경기	당꾸이중	물류센터		물류센터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X	X	0	0	X	사고성 재해	기타	사촌 매형	해당 없음
2023. 07.18	2023. 08.31	전라	박성도	선박부품조립회사		조선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0	X	0	사고성 재해	기타	동생	해당 없음
2023. 08.07	2023. 09.19	경상	ㄱ씨	계룡건설	영인산업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	X	0	X	0	X	사고성 재해	기타	알 수 없음	해당 없음
2023. 08.11	2023. 10.05	부산	강보경	DL이앤씨	코오롱건설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대책위 구성	0	X	0	0	0	사고성 재해	엄마	누나	해당 없음
2023. 09.27	2023. 10.07	대구	A씨	건설회사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알 수 없음	해당 없음
2023. 10.05	2023. 10.28	강원	나씨(2명)	정선군청		공무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0	X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누나	해당 없음
2023. 10.27	2023. 11.01	경기	A씨	영풍제지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0	X	X	사고성 재해	기타	동생	해당 없음

사망 일	언론 보도 일	지역	재해자명	원기업	하청 기업	직업	고용형태	성 별	유가족 참여 정도	진 상 규 명	산 재 승 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 있는 보상	재발 대책 마련	재해 유형	주요 참여 유가족	가족 추 가 및 비고	추 모
2023. 12.24	2023. 12.27	경기	이봉재	영풍제지	협 력 업체	제 조 업 노 동자	비정규직	남	유가족 참여	0	X	0	X	X	사고성 재해	자식	딸, 아들	해당 없음

“전태일도 몰랐는데, 내가 이소선처럼 싸울 줄이야.” 고 김동준 현장실습학생의 어머니 강석경, 고 이한빛 노동자의 아버지 이용관의 인터뷰 제목은 이 시기 산재 유가족운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이다.

“동준아, 오늘도 엄마는 한다. 오늘도 너한테 멧멧하게 무언가 하고 왔어” (강석경),

“한빛센터는 내가 애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이거라도 해야 내가 덜 아파요” (이용관),

“진짜 무엇을 아들이 원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김미숙)¹⁶⁾라는 말처럼 산재 유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유지를 이어 운동의 한 주체로 활동하는 유가족,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이것이 3기 산재 유가족운동을 정의한다. 이외에도 에스티유니타스 고 장민순 노동자의 언니 장향미, 청주방송 고 이재학 노동자의 동생 이대로, 쿠팡 고 장덕준의 어머니 박미숙 등 사고의 유형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산재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재승인과 보상의 영역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형 혼자를 위한 싸움 아니었다” 라는 고 이재학 노동자의 동생 이대로의 말처럼 산업과 사회 전반에 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들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 처벌과 사과’ 요구는 대책위원회라는 시민사회와 유가족의 연대체 그리고 민 혹은 민관이 함께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간호노동자, 비정규직 방송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 택배노동자, 집배노동자, 발전비정규직, 철도비정규직, 현장실습생, 집배노동자, 배달노동자, 급식노동자, 조선업(비정규직)노동자, 제빵노동자 등 수많은 직종에서 대책위 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으며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통해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산재노동자 빈소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관심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게 증폭되었다. 이 중심에 유가족이 있었다. 산재 유가족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대책위 구성 여부나 사회적 과급력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16) “12월 22일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에 함께 주십시오”.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2018.12.19.

유가족은 대책위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사건해결의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3기 유가족운동의 주요한 경향에 대해서는 2장의 연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산재 유가족운동의 본격화는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나아갔으며 이를 전후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 산재노동자의 이름을 딴 단체들이 설립되고,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이 공식화 되기도 하였다. 〈다시는〉의 활동은 3월 20일 본 연구 발표회에 참여한 권미정의 토론문(연구보고서 부록 참고)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3기 산재 유가족운동의 특성과 세부 내용은 두 글에 위임하고자 한다.

유가족과 노동조합과의 연대에서 나아가 유가족들이 단체를 만들고, 전국적 범위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종교계, 전문가, 때로는 정부를 포함하는 대책위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축했다. 기업에 산재 인정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공적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설치 등으로 확대되었다. 산재사망이라는 재난에 직면한 불운한 익명의 피해자에서 가족의 유지를 이어 산재사망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연대운동의 중심이자 투사로 활동하는 유가족이 등장한 것이다. 1기와 2기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 가장 큰 산재 유가족운동이 이뤄진 시기가 3기였다.

3) 결론과 과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유가족들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산재 유가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였다. 자료의 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는 정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 산업재해 문제해결에 매우 큰 역할을 한 유가족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더불어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산재 유가족들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된 산재 유가족들의 활동, 사회분위기의 변화로부터 이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연속선 위에서 이름 없는 노동자, 이름 없는 유가족이 아니라, 최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유가족들과 산재사망 노동자의 모습처럼 이름과 사건과 이야기가 담긴 산재사망노동자와 유가족들을 정리하고 싶었다. 열 몇 개의 항목을 체크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178건의 사건이 기억되고, 이후 더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와 유가족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

마지막으로 산재 유가족운동을 정리하며 들었던 고민,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 등 외에 아주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 몇 가지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서론에 밝힌 것처럼 산재 유가족의 사회적 역할 증대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운동’이 산재 유가족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회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의 변화 속에서 산재 유가족운동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산재 유가족운동이 피해자운동이라면, 다른 산업재해피해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산재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왜 더 주목했는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 지점이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산재 유가족운동’을 별도로 구분하여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앞서 이야기한 산재 유가족들의 사회적 역할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있길 바란다.

또 다른 과제는

산재 유가족과 산재사망 노동자에게 무관심하던 시기, 익명으로 등장했던 노동자와 유가족이 사회적인 관심과 당사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구체적인 형상을 띄게 되었다. 유가족과 산재사망노동자의 ‘어떤 특성’이 관심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특성’ 속에서 어떤 산재사망은 연대를 통해 크게 대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작은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왜 발생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산재 유가족운동을 논의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향후 더 큰 논의와 운동이 이어지길 바란다. 오랜 시간 사회가 이뤄내지 못했던 과제들을 풀기위해 너무나도 큰 노력을 한 산재 유가족들에게 행복과 수많은 응원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마찬가지로 먼저 간 가족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산재 유가족들에게도 안식과 행복이 깃들길 바란다.

III. 산재 유가족운동과 진상조사보고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소

1. 유가족운동과 진상조사 현황

산재 유가족운동은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구의역 사고 이전에도 유가족이 싸움의 전면에 등장하여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활동의 주체로 서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산재 유가족운동의 특징은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전 활동과 대비된다.

우선, 본 연구는 산재 유가족운동의 가장 큰 정당성을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것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호로 요약된다고 본다. 책임자 처벌의 경우 법적 처벌이나 기업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기에 유가족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진상규명’으로 집약된다.

그렇다면 유가족들은 왜 ‘진상규명’을 요구할까? 죽음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묻는다는 것은 그 죽음이 곧 개인적 죽음이나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 해당 죽음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유가족운동은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의 극한적인 방법 등이 동원된다. ‘때 이른 죽음’을 전면에 앞세운 애도 시위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위반하며 죽음을 삶 안에 다시 가져다 놓는 기괴한 장례 의례다. 애도 시위의 가장 앞에 유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사회통념을 건드리는 것이

기에, 유가족의 등장은 복잡하고 강렬한 정서를 사회적으로 유발한다. 때문에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죽음의 원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궁금증 이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투쟁은 죽음의 원인이 유가족에게 충실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을 전제한다.

한국사회의 산재 유가족운동의 특징을 생각할 때, 억압적인 방식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화하고 사소화, 사사화하는 권력작용 아래 유가족의 ‘위치’가 이미 구조적으로 할당되는 조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조건 아래서만 유가족운동의 강렬한 정서와 활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가족운동이 산재운동에 끼친 영향과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중간에 회사측과 보상에 합의하는 등의 포기 과정 없이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긴 14건의 사건을 다루고자 한다.

14건의 사건은 1개 이상의 진상조사보고서(이행보고서 포함)를 작성해 총 19종의 보고서를 우리사회에 남겼다(아래 <표 1> 참조).

<표 1>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주체와 작성 현황(2016~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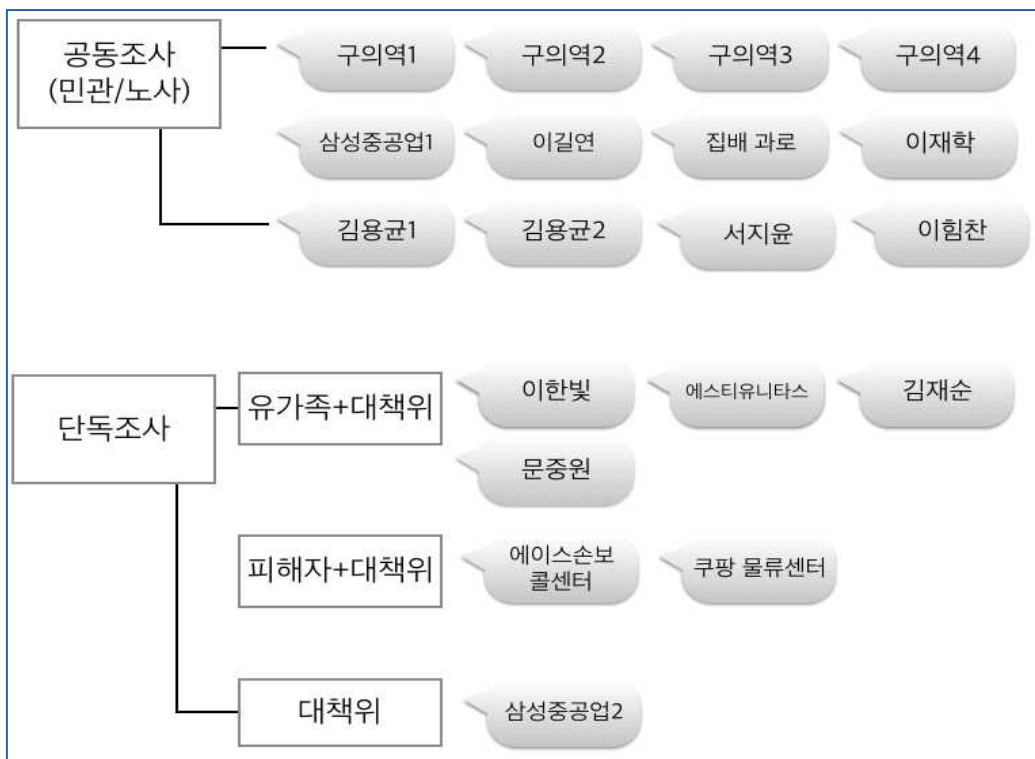
번호	사고일	사고명	보고서 제목	작성 주체	민/관 (노사)	유족/노조 참여
1	16.05.28.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민+관	유족 위임 노조 참여
2	16.10.26.	이한빛PD 자살 사고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조사보고서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민	유족 참여 노조 참여
3	17.05.01.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망사고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민+관	유족 불참 노조 참여

번호	사고일	사고명	보고서 제목	작성 주체	민/관 (노사)	유족/노조 참여
4	2017	이길연 집배노동자 자살사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조사보고서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광주 지역 대책위원회	노+사	유족참여 노조참여
		집배원 과로사, 과로자살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민+관	노조 참여 유족 위임
5	18.01.03.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사고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공인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민	무노조 유족 참여
6	18.12.10.	김용균 사망사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민+관	노조 참여 유족 참여
7	19.01.04.	서지윤 간호사 괴롭힘자살사고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 조사결과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민+관	노조 참여 유족 참여
8	19.11.29.	문중원 기수 자살사고	고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 조사 보고서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민	노조 참여 유족 참여
9	20.02.04.	이재학PD 자살사고	CJB청주방송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CJB청주방송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노+사	노조 참여 유족 참여
10	20.05.22.	김재순 산재사망사고	고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민	노조 참여 유족 참여

번호	사고일	사고명	보고서 제목	작성 주체	민/관 (노사)	유족/노조 참여
11	20.03.08.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에이스손해보험 코로나19 집단감염 실태 조사단	민	노조참여 피해자 참여
12	20.05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	쿠팡 집단감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쿠팡발 코로나19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민	노조참여 피해자 참여
13	22.01.30.	이힘찬PD 자살 사고	스튜디오S 고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스튜디오S 고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노+사	노조참여 유족참여

이를 작성 주체별로 유형화하면 아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작성주체별 진상조사보고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의 사건에 1종 이상의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종 이상의 경우 번호를 달았다.

작성 주체별 유형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민관 합동 혹은 노사공동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보고서가 노사합의로 제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업과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진행된 갈등 끝에 최종 합의의 결과로 제출되어 진상조사활동이 시작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의역 사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사고, 집배 과로사 개선추진단, 이재학피디 사고, 김용균 사고, 서지윤 사고, 이힘찬 피디 사고 등 8건 12종의 보고서이다.

2) 대책위원회와 유가족 또는 피해자와 함께 이 독자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기는 경우이다. 이 중 유가족과 대책위가 함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우로 이한빛 피디, 에스티유니타스 사고, 김재순 사고, 문중원 사고 총 4건 4종의 보고서가 해당된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와 쿠광 물류센터는 코로나19 집단감염사고로 인한 피해 노동자집단이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했다. 에이스손보 콜센터의 경우, 원·하청과 피해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진행과정에서 회사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사무금융노조가 우분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겼다.

쿠광물류센터의 경우, 처음부터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쿠광 측이 피해 책임에 대한 완강한 부정에 따른 방책이었다.

3) 마지막으로 공동조사기구가 구성되기 어려운 경우 중 대책위원회 독자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경우 유가족은 가장 먼저 회사측과 보상에 합의해 싸움 과정에서 이탈했다. 당시 부상을 입었던 피해생존 노동자에 따르면 회사측이 당시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대책위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민관조사기구가 진상조사보

고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시민대책위 일부가 남아 피해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생존 노동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보고서를 남긴 사례이다.

이 시기 산재 유가족운동의 특징은 시민대책위 형식으로 묶인 고인의 작업 동료들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해 사회적 목소리와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며 ‘산업재해’를 사회적 이슈를 만들면서 유족 보상을 넘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산재사망사고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기는 경우, 거의 대부분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가족 참여가 담보된다. 높은 수준은 투쟁의 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처럼 진상조사 과정에 유가족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기고자하는 유가족의 의지는 죽음에 대한 개별적 고통을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가족의 죽음을 개인의 것 혹은 개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만 진상규명의 요구가 현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될 수 있다. 진상조사는 개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 목적만이 충족되어야 한다면 책임자의 사과와 인정 그리고 충분한 보상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진상조사는 작업장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내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다. 이는 유가족의 요구가 가족의 죽음 규명을 넘어 살아있는 동료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염려’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유가족의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가 전제된다.

노동사회운동 역시 유가족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진상규명’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축적된 전문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사고조사는 매우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연결해내어 추상적인 구조적인 원인을 구체화시키는 고도의 작업일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현장성’에 기반한 조사가 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진상규명 활동의 중요한 물질적 성과로 작성되는 진상조사보고서는 유가족들의 능동적, 주체적 참여와 노동시민사회의 운동적 역량이 집중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유가족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결합과 관계설정 없이는 이러한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높아진 가운데 2016년 구의역 사고부터 2022년 이힘찬 프로듀서 사고까지 매우 집중적인 시기에 진상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곧 사회운동의 성과임과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행동하는 유가족’이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건별 유가족, 시민대책위의 활동과 진상규명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중 특히 구의역 사고의 대응 과정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사건별 진상조사 활동 분석 : 유가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1)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

-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 2016.7.28.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2016.8.25.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2016,12,20.
- 서울교통공사,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권고사항 조치결과〉 2018.6.

① 진상조사 활동

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하청노동자 ‘김군’ (1997년생, 19세)¹⁷⁾이 역사에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이다.

‘김군’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사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이 총 4종이 제출되었다.

보고서가 4종이 제출된 이유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를 둘러싸고

17) ‘구의역 김군 사건’은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의 사회적 이름이다. 사망 당시 고인이 19세 였다는 점 때문에 ‘김군’이 되었고, 유가족이 사망사고 기사에 대한 악성댓글로 인해 김군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김군’이 되었다.

서울시와 시민대책위(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53개 시민단체 참여) 간의 이견이 있어, 작성 주체별로 각각 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도한 보고서도 이전, 관 주도의 ‘백서’와는 달리 ‘사고원인조사’를 목적으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 작성되었다는 차별점이 있다.

가장 먼저 작성된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구성된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했다. 위원회는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가 위원장으로,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해 2016년 6월 8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의 조사인원 23명(서울메트로 2명, 서울도시철도공사 2명 포함)을 투입해 조사활동을 지원했다.

시민대책위는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서울시가 구성할 때, 유가족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시민대책위와 함께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민대책위를 배제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별도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 결과, 시민대책위는 6월 7일 서울시 교통본부장이 입회한 가운데 유족 대표와 서울메트로 대표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하청노동자 ‘김군’ (1997년생, 19세)이 역사에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이다.

‘김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사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이 총 4종이 제출되었다.

보고서가 4종이 제출된 이유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민대책위(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53개 시민단체 참여) 간의 이견이 있어, 작성 주체별로 각각 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도한 보고서도 이전, 관 주도의 ‘백서’와는 달리 ‘사고원인조사’를 목적으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 작성되었다는 차별점이 있다.

가장 먼저 작성된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구성된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했다. 위원회는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

관)가 위원장으로,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해 2016년 6월 8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의 조사인원 23명(서울메트로 2명, 서울도시철도공사 2명 포함)을 투입해 조사활동을 지원했다.

시민대책위는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서울시가 구성할 때, 유가족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시민대책위와 함께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민대책위를 배제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별도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 결과, 시민대책위는 6월 7일 서울시 교통본부장이 입회한 가운데 유족 대표와 서울메트로 대표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본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 ▶ 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진상조사단은 노동조합, 서울메트로, 시민단체(시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에서 참여해 구성한다.
- ▶ 나. 서울메트로는 위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 다. 서울메트로는 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위 합의에 기초해 6월 27일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운영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정식으로 출범,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교통전문가, 안전전문가,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 비정규노동전문가, 청년활동가를 포함한 15명의 진상조사위원회 10명의 지원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진상조사단의 목표는 구의역 사고의 원인조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안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지하철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와 운영기관에 권고하는 것으로 진상조사의 범위를 확정했다.

그 결과, 8월 25일 1차로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의 진상조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로 지하철 안전 전반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분석,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2차 진상조사에 들어가 44개의 상시·지속적 외주업무 중 10개 업무와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에 제출했다¹⁸⁾.

서울시가 주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와 시민대책위가 주도한 ‘진상조사단’ (위원장 권영국)은 각각 구성, 활동했지만 활동과정이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이지는 않았다. 먼저 출범한 진상규명위가 7월 23일 소위원회별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워크숍’에는 진상조사단이 참여해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마지막 4번째 보고서는 이행점검보고서다.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구성운영 방안(2016.6.27.제정)에 따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지고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대책위와 서울시가 별도의 이행점검 단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행점검단위를 함께 구성하여 검토한 결과보고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2018년 6월에 제출하게 된다.

② 구의역 사고에서 유가족의 의미

이로써 총 4종의 민관 공동조사보고서가 시민사회에 제출되었다.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상조사 활동은 이후 이어지는 진상조사 활동들에 앞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전형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대부분의 보고서가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아래 ‘공적인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정부차원에서 수용된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구의역 사고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구의역 사고가 4종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마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애도와 분노가 형성된 점 둘째,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의 시민대책위 구성과 활동¹⁹⁾ 셋째, 유가족의 공개적인 사회적 발언 넷째, 서울시의 타협적 수용 등이 작용한 결과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분노 확산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산

18) 2차 진상조사의 범위는 44개 외주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1차 진상조사단 조사위원의 교체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발생 등으로 조사활동의 한계가 있어 자체적으로 축소했다(2차 보고서 참조).

19)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에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한 하청노조가 있었지만, ‘김군’은 비노조원이었다. 그러나 소속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하청노조와 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시민대책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일견 당연한 행위로 보이지만, ‘소속조합원의 사망사고가 아닌데, 관여하는 것이 맞나’는 문제제기가 노조 내부에 있었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재사망은 오랫동안 ‘뉴스’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의역 사고는 1988년 당시 15세였던 문송면 사망사고와 원진레이온 산재사고 이후 그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무수한 산재사고 중 하나가 유독 ‘사건화’ 되는 원인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일 뿐만 아니라 우발적이다. IMF 위기 이후 불안정 노동은 노인들과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먼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무감각한 정부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구의역 사고가 있기 얼마 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강남역 사건으로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를 강남역의 애도시위와 페미니즘 운동으로 연결,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한 장 안에서 구의역 사건은 세월호-강남역을 잇는 포스트잇과 자발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안전 곁에 오랫동안 감추어진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공론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분노는 사고 현장 ‘김군’의 작업가방에 있던 컵라면이 언론 사진기자에 포착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김군의 당시 나이가 19세였다는 점에서 청년문제가 청년실업의 차원을 넘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로 확장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청년들이 사고 초기 구의역 사고 애도시위를 주도했고, 강남역 사건에 이어 포스트잇으로 표현되는 시민들의 참여적 애도가 확산된 결과, 사고의 시간이 확장되고 사고 장소가 연장되면서 ‘사건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청년단체의 시민대책위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시민대책위에 산재사고에 대한 대응활동을 이어온 노동안전단체 뿐만 아니라 청년단체들과 학생운동조직을 포함해 53개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²⁰⁾.

무엇보다 시민대책위는 ‘컵라면’이라는 사회적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킨 공통코드(common code)에 더해, 유가족을 지원하며 사고 당사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등장하도록 조력했다.

‘김군’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단 한 번이다. 구의역 사고에서 유가족의 목소리는 단 한 번이었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시점에 사회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20) 대책위 참여 단체 중 청년단체는 청년전태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흡수저당 등이 있다.

〈 ‘김 균’ 어머니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 2016년 5월 31일. 강조는 인용자

바쁘신 와주신 와중에 우리 아이 이야기를 들으러 온 기자들에게 감사한다.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해서 왔다. 한 가지 부탁한다. 동생이 있다. 동생이 상처로 다치지 않도록 사진과 목소리 변조 부탁한다.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가 필요하겠는가.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 아들을 살려 달라.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가 온몸이 부서져 피투성이로 안치실을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회사 측에서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 아이가 지키지 않아 그 과실로 죽었다고 한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지만 너무 억울하다.

메트로 설비 차장이 저희를 찾아와서, 보고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전차 운행 중에 작업하면 죽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게 정비기술자인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키를 훔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위험한 작업을 하겠나.

우리 아이는 입사 7개월의 20살이다.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개죽음을 당했다니요?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다. 제발 부탁한다. 힘이 없어서 저희가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혀 원한을 풀고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이를 확인하라고 해서 (안치실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이 피로 떡이 쳐 있고 얼굴이 통통 부어 있고 뒷머리가 날아간 시체가 누워있었다. 20년을 키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 저 처참한 모습이 우리 아들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뒤통수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아이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다. 뒤통수가 날아가 있는 시체가 절대 우리가 아이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짙은 눈썹과 옷가지가 있는데. 그날 입고 나간 옷이 맞다. 어느 부모가 아이를 잃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가 죽는 날 나도 죽었다.

눈을 감아도 아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마지막에 봤던 처참한, 찢어진 모습만 떠오르고 전동차에 치이는 모습이 떠오른다. 제 심장이 저 지하철 소리같이 계속 쿵쿵

거린다.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까, 무서웠을까. 3초만 늦게 문을 열었다더라면. 그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제 남은 인생은 숨을 쉬고 있어도 죽은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명예회복밖에 없다. 간절히 부탁한다. 우리 아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저도 우리 아이를 보내주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보낼 수는 없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하는 것인지 아직 빈소도 마련하지 못했다. 차가운 안치실에 저희 아이가 있다. 제발 아이를 떳떳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부모로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전부다. 죽은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차라리 팔다리가 끊어진 것이라면 제가 수발을 들어주며 살 수 있다.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책임감 있고 반듯하라고 가르쳤다. 우리 아이 잘못 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둘째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책임감 있고 반듯하게 키우지 않겠다. 책임자 지시를 잘 따르면 개죽음만 남는다. 산산조각난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둘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첫째를 그렇게 키운 게 미칠 듯이, 미칠 듯이 후회가 된다.

우리 아이 걸모습은 무뚝뚝하지만 속 깊고 착한 아이였다. 그 나이에 어머니에 뽀뽀 하며 힘내라고 말하는 곰살맞은 아이였다. 대학을 포기하고 공고를 가며 돈을 벌겠다고 스스로 선택했다. 장남으로 책임감으로 공고를 가서는 우선 취업해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대학은 나중에 가겠다고 했다. 그때 진짜 말렸으면 정말...

취업을 하고 백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는 적은 월급 쪼개서 지난 1월부터 적금을 5개월, 백만원씩 다섯번 부었다. 동생 용돈을 주는 착한 아이였다. 끼니를 걸러가며 일하고 그걸 혼자 견디고 집에 와서는 씻지도 못할 만큼 지쳐 쓰러져 잤다. 힘든 내색하지 않고 그 직장에 다녔다.

안전장치도 하나 없는 환경에서 끼니를 굶어가며 일했다. 솔직히 얘기를 했다면 부모로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다. 백만원이 뭐라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장남으로 책임감이 있어서 부모가 걱정하고 그만두라고 할까봐, 조금만 더 참으면 공기업 직원이 된다는 희망으로 참았나보다.

차라리 책임감 없는 아이로 키웠다면 피시방을 가고 술이나 마시는 그런 아이였다면, 그런 아이였다면 지금 제 곁에 있을 것이다. 왜 책임감을 쓸데없이, 왜 그렇게 지시에 고분고분하라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다니면 상사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렇게 안하면 잘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런 게 다 후회가 된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아이 친구들이 찾아왔다. 졸업하고 친구들끼리 여행갈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아이가 주말에 일하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음에 간다고 우리 아이는 못 간다고 했다고 한다. 그 내용도 저는 몰랐다.

친구들 내용을 듣고 보니까 또 부모를 위해 여행을 못 간 건가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속상할까봐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살아있다면 우리 아이가 속이 깊다고 표현하겠지만 가슴이 찢어진다. 사고가 난 다음날이 우리 아이 생일이다. 다른 날도 아니고. 태어난 날. 그날 잘 잤다오라고, 올 때 케이크라도 사서 식구들과 축하해준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죽은 당일에도 보니까 하루종일 굶고 시간에 쫓기며 일했을 뿐이다. 근데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니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다. 유품이라고 그 회사에서 갈색 가방을 병원에서 받았다. 가방을 처음 열었다. 학교 다닐 때만 검사한다고 가방을 열어봤지 처음 열어봤다. 왜 거기에 사발면이 들어있나.

여러 가지 공구와 숟가락이 함께 있다. 비닐에 싸인 것도 아니고. 그 사발면은 한끼도 못 먹어서 그걸 먹으려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먹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그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대기하다가 그것이라도 먹고 출동하려고 숟가락을 그 공구와 함께 섞어놓았다.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규정을 어겼다니요. 무슨 규정을 어겨서 배를 곯아가면서 왜 그렇게 했나. 19살짜리가 임의로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 시킨 것은 자기들인데 규정을 어긴 것은 우리 아이라니.

제발 억울함을 밝혀달라. 한창 멋 부리고 여자친구 사귄 나이에 죄를 뒤집어쓰고 원통하게 보낼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살아 있는 게 아니다. 동료가 안 부를 물으며 전화해서, 제가 “정말 아줌마는 너 그만두게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도 지하철은 돌아가고 2인 1조로 내보지 않고 혼자만 내보내고 누군가 계속 죽어가고 있다. 죽은 아이 잘못이라니. 정말 엄마가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한다. 간곡히 부탁한다. 다른 것 필요 없다. 살아올 수 없지 않나. 사흘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다. 군대 가거나 유학 갔다고 생각하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몇 년 참을 수 있지만, 군대 가면 휴가라도 나오고 유학 가면 영상통화로 볼 수가 있다. 저는 평생 아이를 볼 수가 없다. 우리 식구를 모두를 죽여놓고 아이 원통함이라도 풀어달라.

우리 아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희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니다. 진실을 알아주고 원통함을 풀어달라. 우리 아이 얼굴만 보여줬지만 뒤통수 날아간 것이 아니라 는 것 안다. 팔이 다리도 부서져서 없고... 어제 구의역 사진이 인터넷에 나왔는데 저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언뜻 봤다.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피투성이더라 제발요. 부탁 좀 드린다. 우리 아이 제발 차가운 데서 꺼내서 보내줄 수 있도록 제발 부탁한다. 저희 아이 잘못 아닌 것 알고 있지 않나. 정말 부탁드린다, 정말 부탁드린다.

위의 기자회견문은 ‘김군’의 어머니가 볼펜으로 여러 번 고치고 눌러쓴 개인의 호소문이지만, 유가족운동의 성격과 목적이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일종의 ‘선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족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은, 장례식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측의 합의 중용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유가족은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회사측의 피해자 과실론을 폭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수많은 산재사망 유가족들이 있었지만, 죽음의 억울함이 사회적으로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측의 회유와 보상합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침묵’이 합의의 전제였기 때문이다. 1988년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중독 사고 역시, 처음에는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강제된 침묵이 버티고 있었다.

“내 병과 관련해 민형사상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고 회사로부터 60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취재에 응할 수 없다.”²¹⁾

산재사망자 숫자보다 더 많은 유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죽음이 사회화되지 못한 채 사사화되어 온 것은 ‘충분한 보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

21) 한겨레, ‘직업병의 상징 원진레이온 사건을 알리다’, 2018.6.5.

한 사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책임'의 부재가 가져온 사적합의의 폭력적 강제
의 결과였다. 따라서 '유가족운동'의 출발점은 이에 대한 거부와 폭로로부
터 시작된다.

“회사 측에서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 아이가 지키지
않아 그 과실로 죽었다고 한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지만 너무 억울하다. 메
트로 설비 차장이 저희를 찾아와서, 보고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전철 운항 중에 작업하면 죽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게 정비기술자인
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키를 훔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위험한 작업을
하겠나.” (기자회견문 중)

회사측이 사망사고 관련해 유가족과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러나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유가족간의 '합의'는 기업-노동자간의
권력관계가 기업-유가족으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과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산재사고라는 '사회적 사실'이 사소화, 사사화되며, 죽음에 대
한 기업의 책임 부정을 위해 죽음의 원인이 피해자 자신이 되는 '피해자 과
실론'이 힘을 발휘하며, 책임의 전가와 함께 정당한(혹은 충분한) 보상이 최
소의 보상으로 전환된다. 회사측이 제시한 최소의 보상에 유가족은 동의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 전체에서 유가족의 정서는 '억울함'에서 무력감과 체
념적인 정서가 지배적인 상태로 전환되며, 거대 권력과 마주한 고립감을 느끼
는 취약한 상태(피해의 개인화)에서 중용되는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가족이 이러한 사적인 '합의'를 깨는 첫 번째 과정은 '피해자 과실론'
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자회견문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피해의 개인화를 부정하며 '사회적 죽
음'으로 재의미화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이란 죽음에 대한 원인규명을 포함한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행위
에 대한 사회적 고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진상규명이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있는 동료들에 대한 '염려'가 포함된다. '진상조사보고서'의 위치는 노동
자의 죽음과 살아있는 노동의 교차점에 자리한다.

“제발 억울함을 밝혀달라. 한창 몇 부리고 여자친구 사귄 나이에 죄를 뒤집
어쓰고 원통하게 보낼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살아 있는 게 아

니다. 동료가 안부를 물으며 전화해서, 제가 “정말 아줌마는 너 그만두게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도 지하철은 돌아가고 2인 1조로 내보지 않고 혼자만 내보내고 누군가 계속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희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니다. 진실을 알아주고 원통함을 풀어달라.” (기자회견문 중, 강조는 인용자)

당장 자식의 때 이른 죽음을 마주한 유가족이 자기의 슬픔에 가두어지지 않고, 자신의 슬픔을 통해 타인의 삶에 대한 염려로 나아갈 수 있는 원초적인 동력은 ‘억울함’ 이다. 김군의 죽음이 구조적인 죽음이라면, 죽음에 대한 슬픔은 살아있는 김군 동료들에 대한 염려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되며, ‘원인 규명’ 을 촉구할 수 있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김군 유가족의 기자회견문을 관통하는 문제의식과 정서는 유가족운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이한빛 부모님 이용관, 김혜영, 에스티유니타스 사망사고의 유가족 장항미 등의 발언과 글을 통해 반복 전승되고 있는 만큼, ‘유가족운동’ 의 특성과 목표가 압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사회적인 공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서울메트로의 구조적 위험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김군의 유가족은 이후 공개적인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았으나, 서울메트로와 유가족간의 합의를 ‘공적 합의’ (위의 6월 7일 합의문 참고)로 만들었고, 이후 시민대책위의 활동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대책위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그림 2〉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규명과 대책 촉구 기자회견’ 중 유가족 발언 (2016.5.31.)

③ 유가족의 조력을 넘어선 동료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의 활동

단 한번, 언론 앞에서 발언하는 것이 전부인 유가족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의역 사고가 가져온 사회적 분노와 충격이 중요한 사회변화로 이어지게 된 데에는 시민대책위 활동이 지속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통상 사회적 죽음을 둘러싼 싸움에서 유가족의 역할은 싸움의 향방을 움직일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운동은 유가족이 이 과정에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주된 활동 내용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때로 구의역 사고처럼 유가족의 퇴장 이후에도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약화되거나 해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며 조력을 넘어선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 유가족의 위임 아래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에 공적인 진상조사활동을 요구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진상규명위를 꾸렸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적인 조사위를 중복해서 꾸린 것은 자칫 예산과 인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다르게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때의 독립성, 객관성이란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채 전문가가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사를 포함한다. 즉 유가족이 위임한 시민대책위, 그리고 김군의 작업 동료들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김군의 동료들, 하청 노동자들의 참여와 활동이 진상조사 과정에서부터 조사 이후 정규직 전환과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직 노동조합들도 김군의 죽음에 대한 ‘반성’과 ‘연대’를 선언하며 이후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에 힘을 보탤다.²²⁾

이러한 동료들의 참여는 ‘피해’의 범주가 산재사고의 당사자와 유가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군’의 사망은 앞선 산재사고의 연장이자,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산재사고의 전사(前史)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들에게 ‘김군’ 사고가 곧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동시에 김군 사고에 대한 동료들의 참여는 ‘동료’의 범주를 확장한다. 업체별로 분절된 하청노동의 특성상 각각 다른 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하나의 동료집단으로 정체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김군 사망사고에 대한 (이전과 다른) 참여는 분절화된 하청노동자들에게 동료의식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된다.

또 다른 의미로, 시민대책위의 결정은 독립성, 객관성이 곧 ‘피해’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운동의 과정 ‘안에’ 진상조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원인조사의 필요성을 수용했지만, 조사의 객관성, 독립성을 전문성으로 대체했고 이 결과 피해와 운동과정의 당사자성이 배제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차이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원칙, 즉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연관된다.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서울시와 진상조사와 관련된 별도의 합의를 이뤘으며, 별도의 세부 운영방안(별첨)을 마련하고 합의했다. 이는 진상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 이면서, 일시적인 진상조사기구의 효력과 권고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보고서는 ‘권고’ 이상의 행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보고서의 운명은 온전히 행정관료의 의지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된다. 수많은 보고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정부 부처의 캐비닛 안에 잠자는 것의 문제는 진상조사보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책위는 서울시와 별도의 운영방안 합의를 통해 진상조사 기간에 서울시와 메트로의 업무 협조, 자료 협조, 비용과 함께 조사결과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

22) 진상조사보고서 권고 이행 중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과 행위는 ‘정규직 전환’의 입장이었다.

를 마련했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 활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보고서 작성 이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의 과정이 뒤따르도록 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책임 아래 서울메트로가 진상조사보고서의 권고내용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세부 권고 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회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행결과 보고서가 2년 뒤에 작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대책위의 활동은 진상조사단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추모사업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투쟁으로 이어졌다. 유가족의 참여 없이 이어지고 있는 추모식은 김군의 동료들과 다른 산재 유가족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가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뤄지는 추모식에 정당성의 시비가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 과정의 주체가 이미 대책위와 동료들 중심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가 갖는 의미다. 구의역 사고에서 유가족은 단 한 번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참여로 유가족의 자리를 김군의 동료들과 시민대책위에 내주었다.

2) 이한빛PD 사망사고

-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조사 보고서〉, 2017.4.18.

① 진상조사 활동

이 사고는 2016년 10월 26일, tvN의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을 맡았던 이한빛PD가 드라마 종영 다음 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故 이한빛PD 유서 발췌

많이 꼬여있었어요. 이십대의 삶은.

항상 더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앞선 단계의 고민을 채 마무리하지 못한 도약이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고민은 옅히고설켜 풀 수 없게 되어버렸네요.

당연하게도 사회생활이란 그렇게 즉각적인 승리감을 주는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나를 버티게 했던 동력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 남은 선택이 없네요.

촬영장에서 스탭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 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 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 세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사회가 굴러가는 데 필수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등지를 틀면 운동을 저버리고 내 영달을 찾더라도 세상의 모순과 빗겨날 수 있으리라 여겼어요.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죠.

바로 이 판을 나왔어야 했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네요. 지금 그만두면 패배자이자 중도포기자 낙인이 찍힌다는 두려움에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네요.

상태가 이러니 그나마 노동착취하는 관리자 일조차 제대로 하질 못했구요.

유가족들은 처음 회사측(CJ E&M)이 이한빛의 자살을 개인의 몫으로 전가하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가, 이한빛의 유서를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관리자’ 로 괴로워했던 심정을 접하면서 회사측의 ‘책임회피’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대응하기 시작했다.

“(회사측은) 한빛이가 실종이 됐을 때도 찾을 생각도 않고 새벽까지 먹고 마셨습니다. 실종신고가 들어가자 책임회피를 위해 엄마에게 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폄하했습니다... 아들의 실종사실을 알고 tvN에 찾아가 선임PD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간 넘게 한빛이 불성실했고 비정규직을 무시해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한빛이의 유서를 보니 이 선임PD의 말이 철저한 책임회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한빛 어머니 김혜영 기자 회견 발언 중)²³⁾

유가족들은 ‘(가칭) 한빛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명예회복)을 위한 가족대책팀’ 을 구성²⁴⁾하고 2016년 11월 2일부터 진상규명을 위해 회사측과 협

23)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7.4.18.

24) 가족대책위는 후에 유가족(어머니, 아버지, 동생), 정병욱 변호사(유가족 대리인), 청년유니

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유가족과 회사측은 3차에 걸친 면담과 3차례에 걸친 질의서를 발송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조사 방법을 협의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1) 유가족과의 합동조사(또는 유가족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는 거부하고 내부적인 자체 조사를 고집하면서 유가족 측에 자료 제출만을 재차 요구하였고, 2) 근무 강도 및 출퇴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내역 등)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면서, 3) 이한빛PD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주변인사의 주관적 진술만을 토대로 이한빛의 근무태만 등을 강조했다(진상조사보고서, 11쪽).

이에 따라 회사측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고 자체조사를 신뢰할 수 없기에 회사측과의 협의를 종결하고, 대책위 자체적인 진상조사보고서를 2017년 4월 18일에 발표했다.

보고서는 크게 두 내용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가족이 요구한 공동 진상조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패했다는 기록이다. 그간의 경과와 회사측의 태도, 발신된 내용을 기록해 회사측이 진상조사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원인이다. 회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련된 진상조사보고서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지만, 이한빛 핸드폰 발신내역과 연출팀 카톡방 내용, 휴대폰 내에 저장된 녹취록 등을 통해 최대한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회사측과 협의를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진상조사보고서는 ‘합의’의 결과로서 제출된다. 그러나 합의가 실패한 경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의 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고, 회사측의 사과 등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위한 사회적 여론화를 위한 방편으로 제출된다. 긴급한 대응의 과정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지원과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작성되는 사고조사보고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이면서,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사고원인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죽음의 원인규명을 위한 원인규명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사회적 진상규명의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며, 원인규명이 사고조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공언되는 한에서 사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2017년 4월 17일은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

온, 이지윤(이한빛 친구) 등 27개 시민대책위로 전환된다.

중이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한빛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J E&M 측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기도 했다.²⁵⁾

대책위는 사망 후 회사측과 협상과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한 6개월이 지난 4월 18일 첫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회단체들과 함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한 끝에, 2017년 6월 14일, CJ E&M이 유가족과 대책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피디가 숨진 지 약 8개월 만이다.



〈그림 3〉 이한빛 피디 사망사건 관련 CJ E&M측이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있다.(대책위원회 사진 제공)

‘티브이엔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14일 씨제이이엔엠과 유가족, 대책위가 만난 자리에서 회사 쪽이 ‘고 이한빛 피디 유가족과 대책위에 드리는 사과의 글’과 ‘고 이한빛 피디 명예회복 및 방송 제작환경, 문화개선 약속’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씨제이이엔엠은 유가족 쪽에 △책임자 징계 △회사 차원의 추모식 △이한빛 피디 사내 추모편집실 조성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금 조성에 관련된 재정적 후원 등을 약속했다. 또 방송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인력의 적정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 포괄적 원칙 수립 △합리적 표준 근로계약서

25) 미디어오늘, ‘문재인, tvN 혼술남녀 조연출 사망사건 진상조사 필요’, 2017.4.20.

마련 및 권고 등 9가지 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²⁶⁾.

이후 이행과정에 대한 대책위 자체의 점검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회사 측이 마련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한빛 재단을 만들었다.

2017년 9월 대책위 활동이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출범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단 설립 활동을 시작해 2018년 1월 24일 한빛센터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은 이한빛PD의 생일날이기도 하다.

② 유가족운동으로서 한빛미디어인권센터

과거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활동은 주로 ‘기념사업회’ 라는 이름의 재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유가족과 열사의 친구들, 후원자들이 모여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열사 추모사업과 장학사업 정도를 진행하는 것이 대체적인 활동 내용이다²⁷⁾.

그러나 ‘한빛미디어인권센터’ 는 열사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과는 달리 방송 현장의 노동조직화와 인권활동을 위한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 짙다. 매년 이한빛 추모제를 진행하지만 더 중요한 활동의 중심은 방송미디어현장의 조직화와 실태를 조사하고 여론화하는데 있다.

또한 이어지는 방송계 비정규직 프리랜서 PD들의 산재자살(일터괴롭힘 자살, 파로자살)에 대한 공동대응과 사회화 그리고 추모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유가족은 산재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의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산업재해 유가족 활동을 넘어 재난참사 현장에서 유가족과 연대하는 것을 넘어 ‘기록작업’ (김혜영님은 이태원참사 작가기록단으로 활동했다)에도 참여하는 등 유가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혜영씨는 유가족으로서 직접 이한빛 죽음과 죽음이후 달라진 삶에 대한 기록을 묶어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책을 출판했으며, 이태원참사 작가기록단으로 활동하며,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기록집을 참사 1주기에 맞춰 출판했다. 그 외에도 여러 신문과 매체에 지속적으로 유가족의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죽음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한 유가족-작가로서 그 처음

26) 한겨레, ‘CJ E&M 대표, 혼술남녀 고 이한빛PD 사망 공식사과’, 2017.6.15.

27)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거친 전태일 재단은 전태일 노동상, 전태일 문학상, 청소년 문학상 등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과 부설 및 수탁기관 등을 통해 좀더 다양한 노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 2017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에 한겨레에 기고한 ‘한빛 어머니가 김군 어머니께’ 이다.

3)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망사고

-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2018.8.
-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 〈활동보고서〉, 2019.4.6.

① 진상조사

이 사건은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내 7안벽에서 작업중이던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 지브와 와이어로프가 추락하여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다.

사고 다음날인 5월 2일 삼성중공업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회사측은 지브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의 운전자의 신원을 상세히 밝히면서 크레인 이동시 신호수 및 운전자가 간섭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 사고의 원인을 현장 노동자의 과실로 규정했다. 이후 회사측은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물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면서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 손해배상 불인정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

유가족들은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같은 날 장례식장을 방문한 박대영 사장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지역 노동단체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사고 유가족 보상과 치유에 직업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노동계 참여 보장, 사고조사 결과 공개 설명회 실시, 피해노동자 25명 산재처리, 크레인사고를 목격하는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치유를 지원하는 전담팀 구성 등 모두 11가지의 요구를 제시했다²⁸⁾. 그러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적극적

28) 경남일보, ‘삼성중공업 보상·치유 직접 나서야’, 2017.5.18.

으로 연결되지 못했는데, 당시 회사측의 피해자와 가족들의 통제가 심한 가운데 발빠른 보상협의를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고 4일째인 5월 5일부터 유족협의회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는 장례절차와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족협의회 차원에서 일괄 합의를 하지 않고 개별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으며²⁹⁾, 5월 15일에는 보상협의를 마무리되었다. 유족협의회와 삼성중공업간의 협의는 공대위의 11개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산재보상금 외에 원청인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위로금 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유가족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고 관련 요구사항도 주로 보상금 요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 사망한 고 박성우의 유족이자 부상자인 박철희씨가 구조의 지연으로 인해 동생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가 남아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생존자 박철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생 박성우 씨를 잃은 아픔을 호소해 시선을 모았다. 박철희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라고 절규했다. 박철희 씨는 "함께 담배를 태운 후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고, 동생은 휴게실 주변에 앉아 작업 도면을 보고 있었어요. '꽝'하는 소리가 들려 하늘을 봤는데 크레인이 떨어지고 있었고 동생이 있던 곳을 덮쳤어요"라고 말하며 사고 당시를 회상했다. 대형 사고였던 탓에 많은 이들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팔이 잘려 고통스러워하는 직원까지 있었다. 그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듣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후 박철희 씨는 '삼성중공업' 사내구조대가 사고 발생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황하며 제대로 된 응급 처치를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³⁰⁾

“이동통로도 없어서 사고가 난 골리앗 크레인으로 중상자를 1명씩 이송시키는 과정에서 (중상자들의) 병원 도착이 늦어졌어요. 동생이 (사고 현장에서) 6번째로 내려갔고, 구급차에 실리기까지 50분이 걸렸어요. 1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초기 대응만 잘했다라도 동생을 살릴 수 있었어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 사고 경과 및 현황,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대책위)

29)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고 8일째 유가족대표 6명 중 3명이 보상협의, 12일째 6명중 5명이 보상협의를 이뤄졌다.

30) 데일리그리드, ‘삼성중공업 향한 형의 절규, “사고가 아닌 살인”’, 2017.5.2.

유가족의 합의 이후에도 지역 공대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특별근로감독, 수사, 작업중지 중 하청노동자의 유급휴업, 목격자를 비롯한 트라우마 대책 등 지역에서 해결해야할 현안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안전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의 영상메시지가 발표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 는 것이었다³¹⁾.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2017.7.3.)³²⁾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재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악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는 어느새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일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아홉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친 분도 무려 스물일곱 분에 달합

31)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겠다’ , 2017.7.3.

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현실이 이런 데도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와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습니다. 산업안전대책조차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습니다.

이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먼저,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후에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31명이 사상하는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17년 8월 20일 STX조선해양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조선업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7년 9월 19일 국민들이 부산노동청에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자, 마침내 2017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는

32) 대통령기록관,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상, 192쪽.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 (19쪽)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과 구성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두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위원회는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 중에서 민간전문가, 조선업 작업 경력 보유자, 관련단체 추천 인사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모두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5인의 참관인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10쪽) 이해당사자 배제는 감정적인 대립을 우려해 배제하며, 직접적인 피해노동자들과 원하청 관계자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³³⁾. 또한 조사방법과 관련해, 사업장의 자료 조사, 현장 방문, 현장 노동자 인터뷰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사자료는 조사에서 제외했다.

조사위원회는 2018년 9월 5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이 참여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이며, 정부 홈페이지에 공식 등록하도록 했으나 그러나 원인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담보되지 않았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중대재해 사고조사의 관행³⁴⁾을 극복하고 조사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정작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실효적인 이행방안이 담보되지 않았다³⁵⁾.

② 또 다른 진상규명 활동, 피해노동자지원단의 ‘활동보고서’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다음해에 피해노동자지원

33) 국민참여조사위는 피해자의 의견개진을 열어두었으나, 실제 의견개진의 통로가 피해자에게 안 내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는 의견개진을 조사위에 하지 못했다.

34) “우리나라의 종래 중대재해 사고조사 관행의 특징을 고려해보면, 기술적인 안전관리의 실패 보다는 원인 규명의 실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현행 중대재해 사고조사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특히 불안정한 행동이나 행동의 실패(안전수칙 불이행) 또는 기술적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 범법 사항에 대한 수사 및 처벌받을 사람의 색출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보다 더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동종 또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에는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사고조사의 과정 또한 감독관에 의해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지만 비공개 수사 위주로 진행되고, 사고조사의 결과도 재해조사보고서나 의견서가 수사자료로만 활용될 뿐 단편적인 언론보도 외에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그나마 재해조사로 밝혀진 원인에 대한 광범한 토론과 사회적 학습을 통해 재발 방지 방안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조사보고서, 18쪽)

35) 참여와 혁신, ‘휴지조각이 된 보고서, 이대로 버릴 것인가?’ 2019.12.3.; 한국경제, ‘대형 사고 특조위 조사권한 부족.이행점검 미진 개선해야’, 2019.9.5.

단은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2017년 11월 2일 국민참여조사위가 출범하자 공대위는 11월 23일 대책위 활동에 대한 평가 회의를 끝으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등에 대한 활동을 사실상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조사위의 구성과 참여,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가 공대위 내부에서 시작되어 공대위의 역할과 위상, 전망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공대위 참여 단체였던 부산·울산·경남 권력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대위가 해산되었다.

이후 진행 중이던 피해노동자 지원과 법률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경남사무소 그리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 모여 ‘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 활동이 시작되었다.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사고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안전보전에 대한 무대책 및 무책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발주자 및 원청의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피해노동자 트라우마 지원활동 및 손해배상 소송과 산재 불승인에 대한 대응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피해지원단은 물량팀장의 산재 승인과 피해노동자의 손해배상, 트라우마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등을 이끌어 내었다. 또노르웨이 신문 Klassekampen의 현지 취재를 주선하였고, OECD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원청과 발주사들의 책임을 묻는 NCP 국제 제소를 진행하였다.(활동보고서, 3~4쪽)

활동보고서의 내용은 두 가지다. 국민참여위가 진행한 ‘사고원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의 관점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나간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민참여조사위의 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적 진상규명 활동의 필요성을 정리하 것이다. 국민참여조사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기능의 구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찾고,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함으로써 관리방법 중심의 재해예방을 강조”하여,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활동보고서, 70쪽)

특히 원·하청 구조가 조선업에서 불가피하다는 조사위의 전체가 가장 문제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참여조사위는 다단계 재하도급은 위법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으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 제도적 검토를 실시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조사위의 입장은 '조선소의 생산 특성상 사내하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조선업 중대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인 조선업계의 불법 파견 문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다단계 재하도급 문제의 해결은 온전히 원청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으로 '조선소 업무 가운데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한 업무는 숙련된 원청 정규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위의 입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이라는 노노갈등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활동보고서 177쪽)

공대위 해산 뒤에 지속된 피해지원단의 활동은 사고조사위 활동을 중심으로 부수적인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사고조사는 국민참여위가 하는 것이’ 라는 공대위 내부 견해에 반대하며 공대위의 활동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 피해지원단은 ‘진상규명’ 이란 사고조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와 ‘치유·회복’ 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민대책위의 참여가 배제된 국민참여조사위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독자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지원단 역시 노동자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의 한계를 짚었다.

피해지원단은 “산업재해 전문가들조차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활동가들이 트라우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산업재해 사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활동보고서, 173쪽)는 점은 피해지원단의 가장 큰 활동성과이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2주기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활동이 완료되어서

가 아니라, 2주기에 맞춰 피해지원단의 활동의 문제의식과 성과 등을 묶어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노동자 트라우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나, 조선소 노동자〉를 함께 제출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몇몇 단체들만으로는 어려운 것이기도 했다.

“노동자 지원단은 피해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피해 문제를 상담하고 국가기관의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사회적 관심의 부족, 노동조합의 부재 등의 사정으로 인해 소수 활동가들의 헌신에 의지해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해야 했고, 사고 발생 후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지원활동은 거의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활동의 지속성이 소수의 활동가들의 헌신에 의존하는 문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활동보고서, 175쪽)

삼성크레인 산재사고를 대응하는 시민대책위, 피해지원단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쟁점과 의미를 갖는다.

첫째, 유가족이 일찌감치 회사측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사고조사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여 국민참여 사고조사라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냈다.

둘째, 민간 공동 진상조사가 수행되더라도 시민대책위의 독자적인 진상규명 활동의 필요성을 정리했다.

셋째, 삼성 회사측은 사고 초기부터 사망자와 부상자를 가르고 ‘유가족과 보상협약’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피해의 범주가 축소·왜곡되었다. 피해지원단의 활동은 이러한 피해의 범주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지원단의 활동과정에서 부상자가 결합하고 2022년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부상자가 법정 증언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며, 사고 이후 피해 트라우마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정리해 〈나, 조선소 노동자〉 책을 만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집배원 과로사· 과로자살

-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 〈서광주우체국 소속 고 이길연 집배원 자살사건 진상조사결과〉, 2017년 12.

5.

-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 방안>, 2018.9.28.

① 이길연 집배노동자 진상조사보고서와 유가족 활동

개선추진단의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 2017년 9월 5일 자살한 집배노동자 이길연 사망사고 진상조사 보고서가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별도로 발표되었다. 집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되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2017년 서광주우체국 이길연 집배노동자 자살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자살직전 남긴 유서,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로 인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즉각 ‘고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 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³⁶⁾. 또한 유가족은 발인을 무기한 연기하고, 시민대책위와 함께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 활동과 함께 유가족(아들 이동하)의 공개적인 활동이 이어졌다. 유가족은 사망 직후부터 언론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2017년 9월 22일 우정사업본부와 유가족은 ‘△우정사업본부는 도의적 책임을 담은 사과를 하고 담화문을 발표한다. △고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유족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고인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에 협조한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출근을 종용한 내용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한다.’ 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시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민변 광주전남지부 서광주우체국 집배노동자 자살사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5명이 세 달간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12월 5일 국회에서 진상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월 11일에는 서광

36) “이길연 주무관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안양우체국 분신사고처럼 죽음의 진상이 은폐됐을 것” 이라면서, “유서를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배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싸울 수 있다” 고 공공노총 우체국노조 위원장이 발언했다. 광주드림, ‘산재은폐, 출근종용이 집배원 자살 몰아’, 2017.9.11.

주우체국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순직신청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2018년 1월 26일, 이길연 조합원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② 개선추진단 진상조사

집배 노동자들은 매년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노동강도로 인해 20여 명 안팎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사고가 반복되어왔다. 특히 2017년 안양우체국 집배원 원○○ 노동자 분신자살 등 2017년 한해만 39명의 집배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이 중 10명이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로 사망하고, 9명이 과로자살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로사, 과로자살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했다.

이에 2017년 8월 25일, 정부가 이를 수용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에 노동분야 및 산업안전 민간전문가위원 6명, 노측위원 2명, 회사측위원 2명이 참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 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단순한 사고조사(원인규명)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야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으로 명칭을 정했다.

약 1년간의 활동 끝에 2018년 9월, 최종보고서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추진단의 의의는 첫째, 처음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우정사업본부와 2개의 노조(집배노조, 우정노조))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출범했다. 둘째, 처음부터 인력충원의 원칙에 대해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고 출발했으며, 집배원뿐만 아니라 여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공무원 사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는 것을 목표로했다. 셋째, 권고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된 이행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했다³⁷⁾.

③ 이행점검단의 운영과 한계

37) 오현암 집배국장, ‘기획추진단 권고안 이행 진행상황 및 최근 노동조건 악화 유형 정리’ 발표문,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개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자료집, 2019.7.1.

추진단은 보고서를 통해 7대 권고사항에 더해 이행점검을 강조하며 이행점검단의 운영을 권고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추진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행점검단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아래 참조)

3. 이행점검단의 운영

- 추진단의 정책 권고가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점검단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7가지 정책 권고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짐.
- 점검단은 추진단의 “전문위원”들로 구성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 집배노조는 참관 자격을 가짐.
- 점검단의 활동 기한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음. 점검단은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점검단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보고 의무를 가지며,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사항들을 지원해야 함.
- 이행점검 기준은 [①이행완료, ②이행후 계속추진, ③정상추진, ④일부추진, ⑤보류] 등 5개의 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함.
 - ※ 이행완료(권고사항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경우)
 - ※ 이행후 계속추진(권고사항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경우)
 - ※ 정상추진(권고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 ※ 일부추진(권고사항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경우)
 - ※ 보류(권고사항이 추진되지 않고 추진이 보류된 경우)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는 추진단 활동과 함께 우편물류체계의 개선업무를 담당할 ‘물류혁신기획단’을 사업본부에 설치하고 집배원의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환경 개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삼성중공업 사례처럼 조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해산하지 않았고, 보고서 제출 이후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2019년 7월 1일에는 대책위원회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대책위와 집배노조는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유가족들은 시민대책위 활동을 함께 참여했는데, 추진단이 권고한 내용을 우

정사업본부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력충원을 핵심으로 하는 장시간 노동 해결정책이 이행되지 않으면 집배원 과로사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족들은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된 충남 공주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 이은장(사망당시 34세)씨의 친형인 이재홍씨는 "건강하고 성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동생은 정규직 지원 원서만 남기고 집에서 숨졌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동생의 장시간 노동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동천안우체국 별정집배원인 전경학(사망당시 53세)씨가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그의 아들 전병준씨는 "아버지는 정규직 집배원은 아니지만 35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고, 최근 주당 60시간 넘게 일을 했다"며 "전쟁 같은 일터에서 아프고 죽는 집배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죽음에서 교훈을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38).

38) 매일노동뉴스, ‘아프고 죽는 집배원 없도록, “아버지 죽음에서 교훈 찾아달라”’, 2019.5.31.



〈그림 4〉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사망 집배원 유가족들(2019.5.31.)

추진단이 보고서 제출이후 해산한 상황에서 대책위와 노조, 유가족이 권고 이행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행점검단의 활동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행점검을 통해 강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행점검단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받는 한에서 점검활동이 제한되었고 추가적인 자료 요구와 현장 방문 등의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활동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5)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사고

- 공인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결과〉, 2018.5.9.

① 진상규명

2018년 1월 3일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장시간 노동과 일터괴롭힘으로 웹디자이너

어 장민순(36세)씨가 자살한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측은 장민순의 자살에 대한 “사망 원인은 우울증”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장민순의 유족 장향미(언니)씨는 동생이 사망하기 전, 2017년 12월 2일 노동부 강남지청에 에스티유니타스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청원했지만,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유족은 ‘노동자의 미래’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를 통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안전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생의 사망사고를 세상에 알렸다. 유족이 ‘노동자의 미래’를 알게 된 것은 그 자신이 넷마블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 ‘노동자의 미래’와는 동생이 죽기 전에 이미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초 노동부에서 그해 근로감독 나갈 물량이 이미 끝났으니 내년 2월 이후에 다른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같이 나갈거라고 사실상 거절답변을 한 직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노동자의 미래에 연락해 회사 고발에 필요한 내용을 상담받았습니다. 노동자의 미래는 넷마블을 고발한 단체였고 저는 넷마블 직원으로 시위전단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고 있었어요.” (장향미님 인터뷰 중에서)

4월 5일 사망사고를 알린 첫 기자회견에서 장향미 유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제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제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장향미 유족 발언, 2018년 4월 5일)

고용노동부는 장민순 씨가 사망하고 나서도 3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가 4월 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시민대책위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날, 뒤늦게 근로감독에 나섰다.

진상조사보고서는 회사측과 합의의 결과로 제출되지 않았다. 진상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자리에서 유족 장항미씨는 “지금까지도 유족이 요구한 야근 근절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책임있는 진정어린 사과, 책임자 징계 및 처벌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³⁹⁾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가족과 대책위가 진상조사활동을 진행한 결과를 담은 것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야근문화 근절 등),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하는 싸움을 이어갔다.

사망사고 6개월 만인 2018년 7월 12일 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이사는 유가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회사측은 사과문을 통해 “짧은 기간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야근 문화와 업무 소통 및 인사 관리의 문제점 등 잘못된 기업문화를 인지하고 개선해야 했지만, 저희 회사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유족과 대책위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 △법정노동시간 준수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과외업무 금지 △직원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무환경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⁴⁰⁾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 불이행에 대해 기업 바깥의 유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항미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리고 유가족의 노력에 대해 정치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회사는) 말로만 약속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똑같은 문제로 정의당에 다시 고발을 당했어요. 수차례 고발당해도 모두 기소 유예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지요. 단순히 유가족과 대책위의 노력만으로는 재발방지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장항미님 인터뷰)

② 유가족 활동

39) 뉴시스,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자살... 유족 “사과, 책임자처벌 어느 것도 안 돼’’, 2018.5.9.

40) 한겨레, ‘과로자살은 회사의 폭력...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8.7.13.

유가족 장항미씨는 회사측과의 합의 이후에도 유가족으로서 과로(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 동생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이 왜 죽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꼭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만두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생이 하고자 했던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저 혼자 힘으론 불가능할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대책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⁴¹⁾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시민대책위와 유가족간의 신뢰와 유대가 두터워지고, 이후 노동안전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그녀 자신이 IT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높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만 〈과로의 섬〉을 번역하고,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를 출판했다.

6) 김용균 사망사고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2019.9.
-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 2021.12.9.

① 진상규명

2018년 12월 10일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김용균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용 컨베이어벨트 밀폐함 점검구에서 설비상태를 점검하던 등 벨트와 롤러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소식은 다음 날, 〈비정규직 그만 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자회견장에서 참여중이던 김용균의 동료 이태성의 발언으로 모여있는 기자들에게 알려졌다.

41) 장항미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는 오마이뉴스, ‘야근없는 일터, 제가 동생 유지를 잊겠습니다’ ; 연세춘추, ‘과로 사회에서 과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다’ 참조.

같은 날, 빈소가 차려진 태안의료원에는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모여 첫 대응회의를 열고, 12월 12일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이 함께하는 시민대책위(‘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김미숙씨는 발전소가 유가족을 만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생긴 사고”라고 피해자 과실론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김용균의 동료들은 유가족에게 “용균이 잘못이 아니다. 회사측은 산재 사고가 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 용균이 죽음의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유가족은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와 함께 진상규명 활동을하기로 결정한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하는 것이었다. 곧바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으로 달려가 지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9,10호기 전면 작업중지 명령 발동 △유가족-노조의 사고조사 참여 보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노조 참여 보장 △동료의 트라우마 치료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김용균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사회적 관심과 분노가 높았다. 이를 인식한 고용노동부는 유가족과 노조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을 살펴본 유가족은 현장을 숨기려는 회사측과 이를 밝혀내려는 노조를 목격하며, 장례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시민대책위에 위임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날 12월 14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균 사망사고는 전례없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처음부터 진상규명을 둘러싼 전선이 명확했다. 회사 내부 사정을 모르는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유가족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회사측의 현장훼손과 은폐시도를 경험하면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 사고의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규정하며 이를 은폐하려는 서부발전과 대립을 명확하게 했다. 이러한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의 활동은 이후 언론보도가 더욱 구체화되고 심층보도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었다.



〈그림 5〉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조사 결과 공개 브리핑’
2019. 12. 14.

시간이 지날수록 김용균 사건에 대한 보도는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건의 외연이 확장되고 지속되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범국민 추모제와 같은 대규모 추모시위를 기획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노동조합들은 지역대책위를 구성, 분향소와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한국사회에서 ‘산재사망사고’를 두고 전국-지역대책위가 구성되고 전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시위와 추모가 이뤄진 것은 김용균 사망사고가 처음이다.

김용균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하청업체 노동조합 연합체인 발전비정규연대회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노동조합만으로는 전체 싸움을 이끌어가는데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충남지역의 노동조합은 노동안전활동을 사업장-지역차원에서 충실히 다져놓았기 때문에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연대와 지원활동이 이뤄질 수 있었고, 유가족의 적극적인 활동과 발언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처음부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부를 상대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김용균 백서, 91쪽)

이를 위해 시민대책위는 두 차례에 걸쳐 자체적인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나는 대책위에 결합한 법률지원팀 중심으로 ‘진상규명의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인권실태조사단을 별도로 구성해, ‘태안 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두 자료는 이후 진상조사기구에서 조사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선행자료가 된다.

시민대책위는 2019년 2월 4일 정부-여당과 〈당·정 발표문〉 및 〈세부브리핑〉 문안에 합의하고, 다음날 2월 5일 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의 부속합의서에 노사가 합의한다.

〈당·정 발표문〉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방안이 중심내용이며, 진상조사관련, “시민대책위와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한다”는 합의를 하게 된다.

또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전 사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다. △진상조사 기구 관련한 공식적인 국무총리 훈령을 발령할 것 △전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각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 기구의 조사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할 것 △단순한 산재에 대한 조사가 아닌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시스템, 원·하청의 운영 및 고용구조, 노동안전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한 노동조건을 포괄할 것 등을 촉구하며, 관철시켰다.

이로부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하는 조사위원이 확정된다.

이후 2019년 9월 김용균 특조위의 종합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김용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브리핑에서 특조위가 결과발표를 끝내자 언론은 특조위가 아니라 유가족 김미숙님의 발언에 집중했다. 언론은 특조위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중요하게 다뤘다. 이는 진상조사결과가 어떤 경로로 사회화되고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경로를 보여준다. 적어도 김용균 사망사고에 있어서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성을 띄었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유가족이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 더 중요했다.

특조위는 김용균의 죽음이 제도의 미비에 따른 김용균의 실수가 아니라 매뉴얼과 제도의 충실한 이행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구의역 사고에서 ‘정상적 일탈’이라는 문제로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와도 다른 것이었다.

유가족 김미숙은 특조위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유가족의 몫이다.” 42)

② 이행점검단 활동과 보고서

김용균 특조위 보고서는 총 22개의 권고안을 제출하고 별도로 ‘이행점검 방안’을 제출했다.

진상조사기구를 합의한 당·정합의에서 이행점검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용균 특조위 운영규정에 특조위가 참여하는 이행점검을 위한 조항을 넣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하고 각 부처와 특조위 조사위원 5인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행점검 활동은 2년에 걸쳐 진행한다는 것 등을 포함함 권고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는 특조위가, 권고 이행은 정부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고, 특조위도 특조위가 권고한 정규직화가 아닌, ‘자회사-별도 공공기관’을 통한 우회적인 고용대책으로 정부 대책이 마련되면서 이행점검위 참여가 무산되었다.

그러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20년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을 계기로 8월 19일 김용균 특조위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회의의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부터 김용균 특조위원과 함께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분기별 이행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특조위원들의 요구로 4월 현장점검(당진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을 진행했다.

이행점검 과정에서 정부와 특조위원은 각 과제별 이행여부와 완료기준에 대한 여러 이견과 격렬한 논쟁을 동반하며,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6개 과제의 이행범위 및 완료기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2021년 11월 11일 정부와 특조위원들은 이행점검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하

42) 김용균 특조위 언론 보고회가 끝나고 유가족이 특조위원에게 건넨 말이다. 이와 유사하게 당시 언론에도 보고서가 끝이 아니라, 보고서가 싸움의 시작임을 시사하는 인터뷰를 남겼다.

고, 김용균 3주기를 맞아 이행 결과와 이견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으로 〈민관 합동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공동으로 결과보고서 기자브리핑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특조위원 자체적인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특조위가 참여하기 전, 정부부처가 발전5사를 대상으로 한 이행점검은 집배노동 개선추진단 이행점검처럼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행보고서만을 보고받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특조위가 결함한 이후에는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발전5사에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과 당사자 그룹별 인터뷰를 통해 권고안의 현장 작동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행점검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특조위원들이 활동기간 동안 파악된 현장의 이해, 권고안의 심층적인 의미와 작동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행점검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과 같은 주요 권고안의 이행이 매우 미비한 상태에서 이행점검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③ 유가족운동으로서 ‘다시는’ 과 ‘김용균재단’

김용균 사망사고가 한국사회의 노동안전에 끼친 영향은 넓고 깊다. 그 중에서 ‘유가족운동’은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질적인 성장을 이룬 영역이다.

우선,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 산재피해자들이 모여 ‘다시는’을 결성하고, 보다 집단적인 산재 유가족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김용균재단’을 설립해 유가족 김미숙이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유가족운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었다.

‘김용균재단’은 앞서 설립된 ‘한빛미디어인권센터’를 모델로 참조하여, 김용균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업을 넘어 노동자들의 평등한 노동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설립되었다.

김용균재단은 매년 김용균 추모사업을 진행하며, 대중적인 추모집회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단일 산재사고를 계기로 대중시위가 매년 기획, 집행되는 사례는 김용균 사고 이전에는 전무했다.

유가족운동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 활동, 시민대책위와 유가족, 그리고 진상

조사 활동의 관계, 이행점검활동은 이전의 구의역 사고, 집배노동, 이한빛 사망사고의 경험이 종합된 결과였다. 각각의 투쟁과정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치밀하게 기획하고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이전보다 더 진전된 ‘김용균 사례’가 만들어졌다.

④ 김용균의 동료,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와 활동

김용균 사망사고 대응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유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뿐만 아니라 김용균의 동료,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대응이 있었다. 사망사고 직후 ‘위험의 외주화’가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주목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 분석과 주장이 발빠르게 공론화되었던 것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축적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진상조사과정에서 하청노동자와 발전노조 정규직 노동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상황을 소통하고 조사과정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한 조성에 공공운수노조 노안국장은 김용균 투쟁에서 비정규직 동료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꼽는다. ‘하청노조가 원청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실과 협조해 위험한 현장을 방문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활동이 사고 이전부터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김용균 사고 이후 발전소의 위험에 대한 실태가 적극적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도 중요했다. 소수노조라는 한계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정규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서 대책위에 전달했다. 아침에 대책위 상황실로 사용했던 장례식장에 가면, 오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갖다 놓은 회사측의 자료 봉치들이 놓여 있었다고 회고⁴³⁾한다.

7) 서지윤 간호사 괴롭힘 자살사고

-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

43)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한 채록이 아니다. 다만 과거 연구자와 김용균 투쟁과 관련한 대화에서 강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상대책 조사결과> , 2019.9.9.

① 진상규명

2019년 1월 5일, “병원 사람의 조문을 받지 마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장례를 치룬 뒤, 1월 17일 노동조합과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노동조합, 유가족이 참여하는 ‘서울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건 발생 10여 일이 넘도록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있다가 노조가 서울시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촉구하자 공무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려고 하자, 유족과 노조는 이를 반대했다⁴⁴⁾.

서울시는 유족과 노조의 의견을 뒤늦게 수용하여, 3월 12일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 10인을 구성하고 서울시장이 조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로부터 9월 9일 대책위는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며 9개 분야 34개 과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2019년 10월 28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서울의료원 제자리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시민대책위는 서울시는 진상대책위 권고안이 제출되면 3개월 내 이행을 약속했지만, 34가지 권고사항 중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행정부원장의 배치전환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에는 병원 관리자급만 참여하고 평간호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권고 이행 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서지윤 사망사고의 경우, 노동조합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서울의료원분회는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을 만나 설득하고, 진상조사와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4) 청년의사,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시도 책임..진상 밝혀라’, 2019. 1. 17.

8) 문중원 기수 자살사고

-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 2020.2.5.

① 진상규명

2019년 11월 29일 부산경남경마공원(렛츠런파크)에서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씨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고가 발생했다.

“마사회는 선진 경마를 외치는데 도대체 뭐가 선진 경마일까?”

"하루빨리 조교사를 해야겠단 생각으로 죽기살기로 준비해서 조교사 면허를 받았다. ... 그럼 뭐하나 마방을 못 받으면 다 헛일인데.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갖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이런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 ... 이번엔 더 웃겼지. 지난번에 000 처장과 친분이 있는 00이가 좀 더 친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마방을 못 받아서 이번에 주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조교사 면허를 딱 받아서 와 버렸네. 처장과 아주 친하신 분이. ... 내가 좀 아는 마사회 직원들은 대놓고 나한테 말한다. 마방 빨리 받으려면 높으신 양반들과 밥도 좀 먹고 하라고. "

문중원 기수 유서 중

유가족과 부산지역 노동조합, 시민단체는 부산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진행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문중원 시신을 냉동탑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온다.

12월 27일 오은주(부인)와 아버지와 장인 등 유가족들은 상경 투쟁을 결정하고 광화문에 시민 분향소와 농성장을 설치한다. 같은 날,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고 문중원기수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문중원 기수가 사망할 당시, 부산경마공원에는 마필관리사 노조만 존재하고

기수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협력없이 유가족(부인, 아버지, 장인어른 등)들이 투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농성장을 지키며 싸움을 이어갔다.

당시는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투쟁을 벌이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시신을 병원에 안치하지 않고 냉동탑차에 보관해 광화문 농성장 옆에 세워둔 채 극한의 투쟁이 이어갔다.

그러나 2020년 2월 27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추모 농성 천막을 강제철거 했다. 이어 투쟁 10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3월 4일부터 유족 오은주씨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도입했다.

시민대책위와 마사회는 릴레이 협상 끝에 3월 6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이에 딸 3월 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회 개최가 용이하지 않아 100대의 차량시위를 하기로 하고, 장례 절차에 돌입한다.

3월 11일 ‘부경 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공증하고, 이에 따라 4월 8일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5월 21일에는 문중원 기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설립한 ‘부산경마기수노조’가 노조설립필증을 받게 된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힘겹게 싸움을 마무리한 뒤에, 공공운수노조는 2023년 11월,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된 투쟁과정을 기록한 백서 〈노동자, 기수 문중원〉을 발간했다. 오은주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100일 동안의 서울 농성 투쟁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싸움이었다. 코로나19 한가운데에 싸움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사회 기수’라는 낯설고 인식이 좋지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대중적으로 설명해내기도, 설득해내기도 어려웠다. 마사회에 대한 자료조차 귀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노조가 부재했고, 기수들은 ‘개인사업자’, ‘선수’라는 오랜 정체성으로 좀처럼 싸움이 모아지기 어려웠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시민대책위 자체적인 진상조사활동의 결과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중원 기수의 죽음이 어떻게 사회적 죽음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②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진 진상조사 활동⁴⁵⁾

45) 문중원 추모집, 〈노동자, 기수 문중원〉 중 80~82쪽 발췌.

2019년 12월 30일 경마기수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인권, 노동안전, 변호사 등이 모여 ‘마사회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진상조사팀)이 구성되었다.

진상조사팀은 조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사회와 경마기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알리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람들에게 ‘기수’ 라는 직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실태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3일, 진상조사팀은 2017년 말관리사인 이현준, 박경근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변하지 않는 다단계 착취구조 등을 짚어내며, ‘부산경마공원 기수·말관리사 7명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라는 진상조사에 앞선 토론회를 열었다.

진상조사팀은 토론회 이후 과천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일하는 기수와 말관리사를 만나고자 했다. 당시만 해도 기수노조가 없고 마사회의 통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인권침해 실태를 말해줄 기수를 접촉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다. 문중원 기수는 부산경남마사회에서 가장 먼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터라 고인에 대한 차별과 압력이 있었던 터라 다른 기수들이 노조 가입을 두려워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 기수들과 조교사들이 광화문 서울종합청사 앞 문중원 열사 분향소에 조문을 오기 시작하며, 그들을 통해 기수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유가족이 버티고 시민대책위가 싸움을 지속하니 기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문중원의 동료 기수들이 문기수의 죽음과 노동실태를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진상조사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구조적 피해가 되기 위해 동료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뿐만 아니라 기수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까지 내부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마사회만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자영업자 신분상의 어려움 등 기수들이 처한 조건은 그들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온 객관적인 조건에 더해 기수들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집단적인 권리행사를 체념하도록 만들었다. 문기수의 죽음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계기가 되었고, 어렵게 기수들이 모이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기수노조 설립이 이뤄졌다. 기수들은 ‘자영업자’ 신분의 특수고용노동자로, 문중원 기수처럼 개별적으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노조법상 노조 인정이 안돼 교섭권이 없었다.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기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이후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2020년 1월 8일 부산경마기수노조 창립총회에는 마사회 측의 출입거부와 조사방해가 있었지만 진상조사팀이 참여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총회 후 조사팀이 기수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주로 노동권 보장, 노동안전, 인권침해, 고용구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국회를 통해 마사회 관련 자료와 논문 등을 모아, 1월 말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2월 5일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 구조와 노동 실태 조사 보고회’를 열어 결과를 발표했다. 기수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노동’ 실태조사 보고회라고 정했다.

9) 이재학PD 자살사고

-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20.6.22.

① 진상규명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 PD로 14년 이상 근무한 이재학PD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 와중 1심 패소 직후인 2020년 2월 4일 자살한 사고이다.

2월 19일 57대 노동단체, 언론단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가족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회회사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그리고 언론노조의 싸움 끝에 청주방송은 대책위와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해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유가족 추천 3명, 노조 추천 3명, 회사 추천 3명, 그리고 시민사회 추천 1명으로 하여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진상조사위는 3월부터 6월까지 조사활동을 통해 현장조사, 자료조사, 비정규직 대상 전체 설

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이행요구안을 정리하며, 각 항목별 이행기한(단기과제, 장기과제, 정기과제 등)을 정하여 회사측의 미온적 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 안에 이행점검 방안을 명시했다.

이후에도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은 시민대책위와 회사측의 권고 이행을 요구하였고, 3주기인 2023년 기준으로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사화되었다.⁴⁶⁾

② 유가족 활동, 그리고 ‘엔딩크레딧’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서 유가족 이대로(동생)의 역할은 매우 크다. 진상조사단은 유가족의 참여를 전면 허용했고, 유가족 역시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여하면서 조사과정상의 어려운 점을 풀어내는 역할을 했다. 조사과정에서 동료들의 증언 확보가 힘들었을 때, 유가족이 동료들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을 때 자료확보를 위해 먼저 나서서 자료를 구하는 등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보고서와 이행점검까지 유가족의 힘이 컸다.

유가족 이대로(동생)님은 싸움을 시작할 때,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컸다고 말한다. 형의 장례식장에서 이미 시민대책위를 꾸리기로 논의를 하고, 서울에 있는 사회단체와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서울대책위, 그리고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지역대책위를 꾸렸다.

“회사에서도 처음부터 진상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회사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아요. 회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서울 대책위 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대책위가 꾸려진 것이 컸어요. 지역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이게 회사를 움직이게 한 것 같아요.” (이대로님 인터뷰)

이대로님은 장례를 치르자마자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처음 2,3주간 매일 서울에서 청주를 오갔다. 퇴근후에 내려가서 새벽에 올라와 바로 출근하기도 하고, 쓸 수 있는 연차를 모두 썼다. 청주에서 형의 동료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했다.

46) 미디어오늘, ‘고 이재학피디 3주기, 청주방송 약속 이뤄졌다’, 2023.1.18.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으로서 참관하고 상황을 체크했다. 회사측의 진상조사위원회도 참여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지만, 이대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며 조사활동을 눈에 담았다.

“조사과정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올 것인데, 이걸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측 진상조사위원을 신뢰했지만, 가족으로서 결과보고서만 받고 싶지는 않았습시다. 조사가 끝나고 재판결과도 나오고 모든 게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형이 어떻게 일했는지 가족이 제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과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죠.” (이대로님 인터뷰)

대책위에는 언론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정작 언론노조 청주지부는 대책위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동료들을 직접 만나고 설득하며 증언을 확보하는 과정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한명 한명 다 연락을 돌렸다. 만나달라고. 30명 연락했으면 그중 절반 정도가 만나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해주고, 소송과정에서 회사가 위증한 부분도 밝혀주었다.” (이대로님 인터뷰)

이대로님은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3년간의 이행점검 활동을 직접 챙겼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은 생각보다 더디고 불성실하게 이뤄졌다. “유가족으로 지칠 때가 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회피한 형의 동료들의 노동조건까지 챙겨야 하나는 복잡한 심정도 들었다. 그러나 이행점검 활동의 결과 “전국 방송국 중에서 청주방송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적은 방송국이 되었다.” (이대로님 인터뷰).

대책위 활동이 종료되고, 이재학 피디와 관련된 책 〈안녕, 재피〉가 세상에 나왔다.

“형의 일을 이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형의 뜻이 전국의 방송 프리랜서들에게 계약서 한 장이라도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책위 활동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추모사업회 같은 걸 만들어 형과 같은 상황

에 처한 분들에게 소송비 지원이나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한 결과가 방송계 프리랜서 당사자 모임을 만들자고 한 것이고, ‘엔딩크레딧’의 이름을 달게 되었어요.”

이대로님은 생업과 함께 엔딩크레딧 대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 김재순 산재사망사고

-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고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2020.6.4.

① 진상규명

2020년 5월 22일 조선우드 공장 소속 김재순 노동자는 굴착기를 사용해 파쇄 작업장 정리작업을 수행하는 중 파쇄기 상부에서 폐기물 제거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 손상으로 사망했다.

5월 25일 장애인이면서 노동자였던 김재순의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 시민단체들은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유가족 역시 시민대책위에 결합했다. 대책위는 유가족과 대책위가 직접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회사측에 요구했다. 또한 5월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조선우드 산재사망 진상규명,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추모제’를 개최했다.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싸운 끝에 사망 70일째 되는 7월 30일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사과를 포함해 유족 배상 등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유가족은 장례 이후에도 사업주의 법적 처벌을 탄원하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회사측의 무대응 속에 대책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노동조합 활동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7명의 조사위원과 2명의 자문위원을 선임했다. 진상조사단은 ‘중간보고서’ 형식으로 6월 4일에 제출되었다. 사회적으로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구체적인 실태를 정리해서 쟁점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조사활동기간을 최소화하고 조사 정리에 집중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권고사항 및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사고의 구조적 원인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유가족 김선양씨는 대책위 활동 이후,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라는 단체를 만들어 산재사고 대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재순이가 죽고 나서 시작했다. 광주지역에서 재순이가 일했던 것처럼 열악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움을 줘야겠다는 뜻을 가진 분들이 결합해 활동을 시작했다. 45명이 함께하고 있다. 노동조합·진보정당 분들이 많다. 산재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과 유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⁴⁷⁾

11)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 에이스손해보험 코로나19 집단감염 실태조사단,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2021.6.

① 진상규명

2020년 3월 8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작업장에서 발생한 최초의 집단감염 사건이다. 처음 언론에서는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건화되었다. 소속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확진되어 170여명의 집단확진이 되었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코로나19 확진당시 노동조합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설립되었다.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단감염의 원인과 피해실태를 조사할 필요를 제기하고 콜센터의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측과 하청업체는 메타넷애플랫폼, 그리고 노동조합, 의원실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47) 매일노동뉴스, ‘조정우드 고 김재순 아버지 김선양씨,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2023.5.24.

그러나 조사위원이 구성된 이후 원청은 하청업체의 비협조를 이유로 실태조사 연구의 지원과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에서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에서 독자적인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뤄졌으며, 조사 목적은 ‘에이스손해보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고’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노동자들의 피해실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연되고 있는 보상과 치유의 과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다.

조사결과 발표회는 2021년 9월 9일 진행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2021년 6월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아니나, 10명 이상의 집단적인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중대재해’에 해당해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감염 피해자들의 대규모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들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중심을 두고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12)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 쿠팡발 코로나19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쿠팡 집단감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20.9.28.

① 진상규명

2020년 5월 말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 84명을 포함해 150여 명의 가족이 감염되었다. 감염사건을 전후로 3월에서는 고속배송의 압박에 쿠팡배송노동자가 배송 중 심정지로 사망했으며, 6월에는 방역 강화를 위해 독한 혼합소독제로 청소를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물류센터 식당 조리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연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과 상담을 이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물류센터 노동 전반의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부실한 대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 내에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2020년 9월 28일 제출했다.

쿠팡 물류센터는 무노조 사업장이었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대책위 역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② 쿠팡 유가족들의 활동

쿠팡 조리노동자 사망사고, 고 장덕준 사망사고 등 쿠팡에서 끊임없이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사망이 이어졌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쿠팡의 방역지침이 강화되자, 물류센터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그러다 2021년 6월 1일 “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한 청소와 강도 높은 육체노동에 박현경씨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박현경씨의 남편 최동범님은 세 아이를 돌보면서 부인의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이때 쿠팡 코로나19 시민대책위와 연결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했다.

“남편 최동범씨는 아내를 잃은 뒤 쉬는 날이면 매일 쿠팡 목천센터를 찾아가다. 입구 쪽에 차를 세워두고 차와 가로수 사이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었다. 현수막과 피켓 등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다.

‘안전관리 감독 원청인 쿠팡에 있다/ 더 이상 일하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 쿠팡은 물류센터 내 폭염대책 마련하라 / 쿠팡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현경씨가 겪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해도 말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목소리였다.” (〈쿠팡을 해지합니다〉, 94쪽)

장덕준 사망은 과로사로 인한 사망으로 산재인정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이다. 이를 위해 유가족(어머니, 아버지)이 쿠팡측의 야간노동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싸움을 지속해왔다. 본격적인 진상조사보고서는 아니지만, 장덕준씨의 죽음을 비롯해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과 집단감염의 구조적 원인과 실태를 엮어 책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를 출간했다. 유가족 박미

숙씨는 이 책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쿠광 유가족들은 대책위와 함께 몇 차례 모임을 갖기도 했으며, 이후 쿠광노조와 대책위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장덕준 어머니 박미숙님은 쿠광의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장덕준 사망 1년 후,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덕준의 죽음이 과로사로 산재 판정을 받는 것을 계기로 쿠광 물류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사람이 일하기 위해 있어야 할 조치, 장덕준 씨의 부모는 ‘그곳에 우리 아들 친구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는 말을 했다. “최소한 어떤 규제가 만들어져야지, 우리 아들같이,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아무 건강에 문제없던 애가 1년 6개월을 못 버티고 갔어요. 여기는 서서히 죽어나가는 구조거든요.” (〈쿠광을 해지합니다〉, 51쪽)

2021년 5월부터 장덕준의 유가족은 전국 물류센터를 순회하며 야간노동을 철폐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해는 국회에서 산재관련 기업 청문회가 최초로 열린 때이기도 하다. 유가족의 싸움과 사회적 압력으로 쿠광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노동조건 개선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했다.⁴⁸⁾

13) 이힘찬PD 자살사고

- 스튜디오S 고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스튜디오S 고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22.11.

① 진상규명

2022년 1월 30일, SBS에 입사해 드라마국 분사 이후 스튜디오S 소속으로 10년을 일한 이힘찬 프로듀서는 ‘모든 것이 버겁다’ 는 문장을 남긴채 자살했다. 사건직후 고인의 동료들은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의 제작총괄 프로

48) 최종합의문의 내용에는 연장근로 최소화, 시간당 생산량 폐지, 쿠광케어 프로그램 실행, 물류센터 노동여건 실태 용역조사 등이 담겨있다.

듀서를 맡고 있으면서 감당해야할 구조적 문제들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공통되게 증언했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른 후, 수소문 끝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연락을 했고, 2월 11일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스튜디오S 故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는 유가족 대표로 이힘찬 프로듀서의 동생 이희님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돌꽃노동법률사무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민주노동총법률원이 참여하였다.

2월 18일 유가족, 시민대책위와 스튜디오S 측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회사측은 임시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했고,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SBS까지 참여하는 노사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3일 SBS 스튜디오S 측은 노사공동조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대책위는 공개 대응으로 전환해 공동조사 참여를 촉구하고 무산 시 단독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3월 28일, 회사측은 공동조사위원회를 수용하여, 조사위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사기간은 2개월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30여 명에 이르는 관련 인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회사측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11월에 제출했다.

② 유가족의 활동

형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나서 유가족이 된 이희(동생)님이 진상규명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회사측의 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형의 장례식장에 가니 회사 임원과 관리자, 직원들이 “도열” 해 있었고, 보상금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이 보상금을 먼저 말하더라. 가족을 잃었는데 보상금을 이야기한 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형의 사망에 대해 합의를 쓴다는 것이고, 합의를 쓴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게 비인간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이희님 인터뷰)

늦은 밤, 회사측의 눈을 피해 형의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노조와 상의를 해보

라고 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장례기간 동안 보이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노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이희님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형의 죽음에 의문이 남으면 절대 안 된다’ 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던지시 ‘한빛미디어인 권센터’ 를 알려줬다. 수소문 끝에 이대로님(이재학 피디 유가족)과 연락이 되고, 단체와 연결이 되었다.

이희님은 이대로님의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누구든 경험하기 힘든 경험자가 해주는 조언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 이희님도 이대로님처럼 진상조사 위 활동과 시민대책위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가족에게 시민대책위란 어떤 의미일까.

“유가족은 보통 두려움을 느껴요. 개인이 거대 조직인 회사와 상대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내 삶조차 다 무너질 것만 같았다. 상대가 거대 방송국이니까. 이 싸움의 끝에 내 삶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민대책위가 같이 싸우고 있었다. 시민대책위는 개인과 회사의 싸움을 조직과 조직의 싸움으로 바꾸어주었다.” (이희님 인터뷰)

회사측은 공동조사위원회를 완강하게 거부하다 시민대책위가 이 사건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나중에는 공동조사기구를 수용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진상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삶을 더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우리 가족도. 사망 당시 다 지쳐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금도 죄책감에 잘 살 수 없었을 거 같아요... (진상조사 활동이 끝났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고통을 받아요. 형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회사 동료들에게 형의 죽음을 숨기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형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 위축되지 않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자책을 덜 하게 되었어요. 덮는 순간 우리 가족이 회복하는 방법은 없었을 거 같아요.” (이희님 인터뷰)

싸움의 과정에서 이힘찬피디의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조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도 했다.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결심하고 시민대책위와 싸

움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힘친 피디 동료들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의 활동으로 동료들의 참여가 열린 것이다.

3. 소결

위의 사례 중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간의 관계가 단절적이지 않고 연결되고 연장되는 것이다. 유가족의 활동이 시민대책위의 활동으로 확장되고, 유가족-시민대책위의 ‘진상규명’ 활동 장 안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위치지어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보고서를 매개로 진상규명 활동이 지속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방향아래 진상조사보고서로 집약되는 진상조사활동의 방향은 무엇일까?

진상조사보고서는 첫째, 피해의 ‘관점’에서 조사방향과 범위가 설정되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다는 것이 자칫 피해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진상조사의 객관성은 피해자의 참여와 관점을 포함한다. 피해자의 ‘관점’을 포함한 객관성이란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산재노동자의 위치가 하나의 정당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중립성 아래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피해’를 중심에 놓는 것, 즉 기존의 지식권력의 편향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한 객관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화된 객관성의 관념을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산재피해자의 경험과 말이 곧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권력의 장에서 설정된 ‘객관성’ ‘중립성’ 등의 지식이 이미 산재노동자와 같은 소수자의 위치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조사과정이어야 한다.⁴⁹⁾

49) 이는 페미니스트 입장론에서 이야기하는 ‘강한 객관성’ 이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참조.

진상조사활동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활동방향에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구의역 사고’이며, 다른 하나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이다. 이 두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란 과학과 지식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과학과 누구의 지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다. 가치중립적인 과학과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파생될 때, 우리는 유가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14건의 사고를 통해 제출된 19종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추출해낼 수 있는 몇 가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상규명과 진상조사(사고조사)의 의미는 다르다.

통상적으로 진상규명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즉 ‘사고조사’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고조사는 진상규명의 출발이자,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 곧 사고로부터 야기된 피해의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닐뿐더러, 사고 이후 변화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포함해 진상규명은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은폐, 비협조 등의 시도들, 사고를 목격하거나 고인과 관련있는 가족, 동료들의 트라우마, 사법적 해결과정에서의 한계와 문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진상조사보고서가 쓰인 이후에도 유가족을 포함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곤 하며, 이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죽음의 구조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지연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때문에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진상조사보고서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차례 쓰여질 수 있다. 구의역과 삼성중공업 사례처럼 진상조사보고서가 반복될 수 있고, 구의역, 김용균의 사례처럼 별도의 이행보고서가 쓰일 수 있으며, 김용균, 이한빛, 삼성중공업, 쿠팡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의 실태를 책으로 묶어내는 형태로도 생산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상규명과 진상조사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 그러나 이 간격과 불일치가 사건의 재의미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민주적 진상조사의 관점이 중요하다.

재난조사를 비롯해 사고조사에서 지적되어온 것은 사고의 기술적·표면적 원인이 규명되는 한계를 넘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조사과정의 독립성을 객관성과 전문성 못지않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위의 사례를 통해 ‘객관성’이 전문가주의로 이해될 수 있으며, ‘독립성’이 이해당사자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진상조사의 ‘피해자 참여’를 포함한 진상조사의 민주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진상조사는 산업재해가 산업활동의 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하다는 지배적 인식을 뒤집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로부터 산재 피해자의 ‘위치’는 권력관계 속에 배치되며, 진상조사를 이러한 ‘위치’를 평등한 조건 아래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진상조사에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야한다는 것은 피해당사자를 고려한 온정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조사가 수행되고 피해자의 참여로 조사의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된 진상조사위의 전문가주의적 편향이 있다.

이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수행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 방식의 조사위원회는 분명 진전된 제안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진상조사는 다분히 전문가주의적인 편향을 띤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인 조선업 국민참여조사위였다. 그리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라기보다 관료적인 인식에서 나온 편의적인 ‘합리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 시절 구의역 진상조사위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사고원인에 이르는 구체성을 제한한다. 조사위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사고의 구체성으로부터 출발해 구조화된 ‘원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일반적인 실태와 문제,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정리되는 정책보고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특정한 사고조사가 아니라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위라는 점이 중요한데, 애초에 김용균 특조

위도 정부가 제안한 명칭은 ‘화력발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였다. 그리고 조사내용도 화력발전소 전반의 노동안전실태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조사위를 진행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측은 구체적인 사고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특정 사고로부터 비롯된 제도개선 과제에 중심을 두고 일반적인 문제를 짚는 것을 ‘구조적 원인’ 조사로 이해했거나, 혹은 구조적 원인조사를 그것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때문에 이로부터 ‘이해당사자의 배제’라는 방침이 도출된다.

넷째.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가족과 동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가족이 싸우기 시작하면 동료들이 발언하기 시작한다” (김혜진 인터뷰 중)

산업재해에서 유가족운동은 고인의 동료가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마련한다. 동시에 동료의 존재는 유가족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노동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가족의 죽음을 넘어 ‘아직은’ 살아있는 동료의 삶과 노동현실에 대한 염려로 확장되며 진상규명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확장된다.

구의역과 김용균 사고 등에서 비정규직 동료들은 대책위원회 활동부터 죽음의 숨겨진 원인을 드러내고 증거를 수집하며 기꺼이 증인이 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의 참여로 이어져, 죽음에 이르는 원인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산재자살 사고의 경우, 유가족의 활동은 침묵하는 동료들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재학 피디, 이힘찬 피디, 서지현 간호사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중원 기수의 경우 동료들이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쿠광과 에이스손보콜센터 사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피해를 말하면서 노동실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며 노동조합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유가족과 동료의 관계는 죽은 자식을 대신하는 ‘유사 가족관계’로 표상되기도 하고(구의역, 김용균, 장덕준 사고), 죽은 가족의 뜻을 대신해 일터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계승-협력적 관계(문중원, 이재학, 이힘찬 사고)가 되기도 한다.

다섯째, 진상조사활동에서 유가족의 참여는 다양하게 이뤄진다.

유가족의 참여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적인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유가족의 참여는 진상규명 활동 전체 과정에서 작용하는 ‘유가족의 영향’이며 이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의미작용을 포괄한다. 모든 과정에서 유가족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 조건이 된다면 사회운동이 제약되거나 부차화될 수 있다. 거꾸로 사회운동은 유가족의 상징성을 수단화할 수 있다.

진상규명 활동의 긴장은 회사측과 피해자·대책위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와 사회운동 사이에도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유가족과 사회운동단체 사이에서 충분히 소통되어야 한다.

진상조사활동이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유가족이 전체 활동과정에서 유가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김용균, 문중원 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가족 활동을 이어가고 조사활동의 결과를 유가족이 수용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진상조사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유통될 때, 유가족의 역할을 결정적이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처럼 유가족의 ‘공백’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다. 이는 유가족의 부재와는 다르다. 유가족이 자신의 자리를 시민대책위에 내어주는 형태로도 유가족의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진상규명 활동에서 유가족의 참여는 유가족의 몫으로 할당된 ‘피해’의 자리를 확장하고 연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유가족의 위치가 특권화되지 않는 참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조사결과 ‘이행’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이행과정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과정은 또 다른 싸움을 예고한다. 이행점검은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이행과정이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

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노동자와 유가족, 그리고 사회운동의 참여는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진상조사’의 필요성보다 더 적은 이해를 갖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사과문에 따르는 부속합의서가 아니다. 장항미님의 지적대로 적어도 공동조사보고서의 권고 혹은 유가족과 약속한 회사측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제도적 이행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유가족의 진상조사활동이 공적활동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시민대책위의 독자적인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가 중요하다.

제도적인 보장, 합의에 의한 지원이 없이도 진상조사는 가능하며,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운동에서 구축된 역량은 진상조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동료들을 주체로 세울 수 있기도 하다.

이한빛, 에스티유니타스, 김재순, 문중원 등의 사례는 투쟁의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진상조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는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과 서사(이야기)를 제공하며, 동시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공동조사보고서에 앞서 작성되기도 하며, 공동조사위원회가 실패한 뒤에 작성되기도 한다. 자료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투쟁의 한 가운데서 충분한 조사 시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성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매우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집중된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역설적이게도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진상조사활동은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즉 ‘처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는 독립적으로, 공동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1) 진상조사보고서

-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 2016.7.28.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2016.8.25.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2016,12,20.
- 서울교통공사,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권고사항 조치결과〉 2018.6.
-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조사 보고서〉, 2017.4.18.
-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2018.8.
-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 〈활동보고서〉, 2019.4.6.
-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 〈서광주우체국 소속 고 이길연 집배원 자살사건 진상조사결과〉, 2017.12.5.
-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 방안〉, 2018.9.28.
- 공인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결과〉, 2018.5.9.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 안전조사위원회,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2019.9.
-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 2021.12.9.
-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 조사결과〉, 2019.9.9.
-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 2020.2.5.

-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20.6.22.
-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고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 보고서〉, 2020.6.4.
- 에이스손해보험 코로나19 집단감염 실태조사단,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2021.6.
- 쿠팡발 코로나19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쿠팡 집단감염, 부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20.9.28.
- 스튜디오S 고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스튜디오S 고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22.11.

2) 그 외 참고자료

- 삼성크레인사고 피해생존 노동자 구술 기록단(2019), ‘나, 조선소 노동자’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2023), ‘노동자, 기수 문중원’ .
- 전주희 외(2023), ‘위험이 모이면 힘이 된다 -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 사례집’
-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2019), 집 ‘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자료집.
- 태안화력 비저육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백서발간팀(2019), ‘김용균이라는 빛 1-기록과 기억’

5. 별첨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구성운영 방안

2016. 6. 27. 제정

1. 진상조사단의 구성운영 총칙

- 가.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이라 한다)은 지하철 사망재해와 관련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진상조사단은 2016. 6. 17. 유족과의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 나. 진상조사단은 노동조합, 운영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시민단체(시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가 참여하여 구성한다. 진상조사단에는 조사팀과 지원팀을 두어 운영한다.
- 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은 시민대책위원회가 담당하며 조사팀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방안 수립 활동을 한다. 조사팀의 조사위원은 단장 포함 15명 내외로 한다.
- 라. 진상조사단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원팀에는 서울시(교통본부), 운영기관(메트로, 도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팀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참여하고 조사위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보고, 토론, 논의와 자료 협조, 현장조사 지원 등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 마.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준하는 활동을 보장한다. 진상조사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협의한다.

2. 진상조사단의 세부구성

가. 조사팀

- (1)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내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기술전문가, 교통전문가, 안전전문가, 법률전문가, 비정규직전문가, 청년활동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한다.
- (2) 진상조사단 조사팀의 구성은 단장 포함 15명 내외로 하고, 시민대책위원회 논의에 따라 약간 명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지원팀

- (1)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외 1명 참여한다.
- (2) 운영기관으로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장과 기술책임자 1명,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총괄실장과 기술책임자 1명이 참여한다.
- (3) 노동조합으로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등에서 5인 이내로 참여한다.

다. 진상조사단장

진상조사단장은 시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하여 진상조사단에서 선출하고 서울시장이 위촉함으로써 진상조사단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올바른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한다.

3. 진상조사단의 위상

- 가. 진상조사단은 참여단위 어느 한쪽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기구가 아니다.
- 나. 일하는 작업자 중심의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만들어낸다.
- 다. 논의 결과는 정책과 관리감독 방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 라.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지하철 전반에 대한 안전조사, 조사한 내용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지하철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마. 보고서는 서울시장에게만 보고되는 소극적인 보고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가치를 반영하도록 한다.

4. 진상조사단의 조사범위

- 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업무 전반
- 나. 안전 관련 업무 및 시스템 전반
- 다. 위 가, 나. 항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1~4·5~8호선 조사, 9호선은 협조 가능한 부분까지 조사

5.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

- 가. 진상조사단의 전체 활동기간은 10월말까지로 한다.
- 나. 7월말까지 스크린도어 조사결과 및 안전대책을 발표한다.
- 다. 10월말까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제기한 종합적인 지하철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6. 진상조사단의 운영원칙

- 가. 합의서 내용을 포괄한다.
- 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최종 책임자임을 밝힌다.
- 다. 진상조사단 결과는 서울시(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책임지고 실행계획을 낸다.
- 라. 실행계획 집행여부는 조사결과 후 별도의 논의단위를 구성하고 점검한다.

7. 기타 사항

가. 간사

- (1) 진상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를 위해 간사 약간 명을 두어 운영하기로 한다.
- (2) 시민대책위원회 간사는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노동조합 간사는 조성에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서울특별시 간사는 이대현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운영기관 간사는 민광만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장, 강승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나. 업무협조

노동조합 단위, 현장 근무자 등 참가자들은 조사기간 동안 타임오프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근무 협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기관 및 업체와 협의한다.

다. 자료 등의 협조

진상조사단은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진상조사단원들은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현장조사 및 소통

- (1) 진상조사에 필요한 현장조사는 운영기관의 사전 협의 후에 실시한다. 단, 보안시설의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한다.
- (2) 필요시 각 현장의 집담회, 좌담회, 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세부일정과 장소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 (3)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 필요사항은 개별 접촉을 피하고 운영기관 간사를 통해 시행한다.

마. 비용

- (1) 회의비는 진상규명위원회 수준으로 지원한다. (연구비는 제외)
- (2) 기타 필요한 비용은 협의한다.

바. 진상조사단 회의록

- (1) 진상조사단의 공식적인 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기를 두어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상호 확인한다.
- (2) 시민대책위원회 서기는 조경옥 조사위원, 서울시/운영기관 서기는 전재현 서울시 교통본부 주무관으로 한다.

8. 진상조사단의 출범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진상조사단의 정식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기획은 서울특별시에서 내부 협의하여 제출하고 협의한다.

2016. 6. 27.

진상조사단장

권영국

진상조사단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이대현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장 민광만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총괄실장 강승호

IV. [별첨] 토론문

1.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토론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 故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갑작스럽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투사로 만드는 이상한 사회

- 여러 피해 사례를 보니 하나같이 회사측이 유족을 비정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비슷했고 유족들은 억울하게 죽은 것도 너무 부당한데다 죽음조차도 당사자의 잘못이라 함에 억울함을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자식에게 조금이나마 면목이 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처음 일을 당했을 때 마치 꿈처럼 현실이 믿기지 않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허공을 걷고 있는 듯 느낌이 없다. 흑백 사진에 박제된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자식 죽은 날 그 아픈 시간에 머물러 있다)
- 회사측은 유족에게 사고 당사자의 잘못이라는 말과 사고 현장 훼손으로 은폐하니 의심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물청소)
-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누구를 믿고 함께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살던 사회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사람을 믿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회에 적응하다가 갑작스레 감당키 어려운 자식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도와주겠다고 내미는 손 함부로 덤석 잡다가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웠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정신을 차려 결정해야 했습니다.

-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남은 유족이 꼭 유일하게 해내야 할 일이 됩니다. 자식이 한이 깊어 좋은 곳으로 못 갈까 봐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합니다.

■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가장 아파하고 힘든 부모가 어떠한 권한이나 사건을 밝힐 지식도 없는데 왜 부당함을 밝히는 데에 앞장서서 진상조사를 해야 했는지 되려 사회에 묻고 싶었습니다.
-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 안전에 무관심하다 사고나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피해당사자가 잘못이라 하는데 이미 죽은 자는 말을 못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업무 수칙을 지킬수록 더 위험하다.
- 원하청 안전 책임 떠넘기다 사고나면 말단 직원들이나 사고 당사자 잘못으로 몰고간다.
- 특조위 조사 결과 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밝힌 것은 인정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잔인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니 결국 책임을 전가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한 세상이란 게 끔찍했다.

■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재판하면서 실감했다.

- 이미 힘있는 자들에게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었다. 재판장에서 가해자가 더 하고 싶은 말할 수 있고 피해자는 발언권이 없어 가당찮은 말과 막말로 죽은 자식을 휘롱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수없이 겪습니다. 가슴에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온몸이 치가 떨렸지만 수차례 재판을 해야하니 정신을 차려야 했다. 재판 과정 내내 말도 안 되는 치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 아들은 곧 나 자신이었다.

- 세상이 아무리 비뚤어져 잘못되어 있더라도 올바르게 바꾸고자 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투쟁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 땅에 약자인 노동자와 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그들과 함께 올바른 정의를 세워서 더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피해자들의 대부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자해하기 일쑤인데 정신과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고치는 방법은 한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당사자나 유족들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회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하려고 노력해서 산재사망을 막는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으로 공감해 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요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정치권이 선거 유세를 위해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노동 재해나 시민재해 같은 생명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거대 양당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기업이 산재 책임이 없도록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 한 해에 13만 명이 다치고,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전처럼 벌금과 합의금 몇 푼이면 마치 다해준 것처럼 정부가 오히려 더 떳떳하게 굴었음에 치가 떨립니다. 저희는 자식의 죽음 앞에 돈을 논하는 자체가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한 피해 유족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삶이 망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양 자책하며 숨죽여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안전 예방에 힘쓰면 산업재해 대부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있는 이유가 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임을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보여주고 만들어나가길 희망합니다.

2. 산재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권미정

김용균재단 활동가 / 운영위원장

모여 보니 모임 필요를 더 절감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은 후, 산재피해가족들이 김용균님의 부모님을 만나서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전에도 산재로 인한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들은 개별로 흩어져있었다. 대응을 진행한 경우도 있으나 대응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마무리되었다. 개별의 죽음을 이어서 함께 대응할 뚜렷한 목적지가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고교 현장실습생들이 실습기간 중 사고로, 일터 괴롭힘으로, 압박과 무시로 죽음이 이어졌다.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죽음에 현장실습 가족모임, 현장실습 대응이 진행되었고 현장실습 가족들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찾아오고, 삼성반도체 피해가족들과도 만나게 되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건네는 서로에 대한 위로와 연대를 통해, 피해가족들이 모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라났다.

‘다시는 내 아이와 같은 죽음이 없어야 한다’ ‘다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없어야 한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먼저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뜻으로 피해가족들이 모였다. 그리고 피해가족들과 그 싸움을 함께 했고, 하고 있는 단체 활동가들이 곁에서 함께 하고 있다.

특정한 날짜에 출범하는 기획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김용균투쟁을 계기로 모였던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이 2019년 2월부터 <다시는> 이라

는 이름을 사용하며, 2019년 5월 22일 구의역 ‘김군’ 추모제에 모여서 첫 모임을 진행했고, 2019년 8월 26일 2차 전체회의를 하면서 다시는 의 정체성, 참가범위, 활동 등을 함께 정리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는’ 은 산재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다시는’ 은 산재 유가족을 참여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가족만을 참여자로 보지 않는다. 모든 피해자가 참여하기도 어렵다. 직장을 다녀야 하고 생활을 해야 하기에 집중된 투쟁을 할 때처럼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활동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같이 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려는 피해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자 소속된 단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개별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소속된 별도 단체가 없더라도 활동의 주요지점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로 활동하며 다시는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네트워크 조직인 <다시는> 은 피해가족들의 치유와 일상회복, 산재 대응, 법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산재 대응과 피해자 추모

- 수원 청년건설노동자 김태규님 투쟁, 광주 조선우드 고 김재순님 투쟁, 경화건설 고 김일두님 투쟁,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 투쟁,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피디 투쟁, 경동건설 고 정순규님 투쟁, 평택항 고 이선호 님 투쟁, 여수 홍종운님 투쟁, 동국제강 고 이동우님 투쟁, 디엘이앤씨 고 강보경님 투쟁 등에 결합 (유족간담회, 집회와 문화제, 대책위와 조율하거나 대책위가 없는 투쟁 지원, 추도식 참여 등)
-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건에 다시는 피해가족들이 조언하고 대응
- 투쟁 마무리 후 주기별 추모식 결합 또는 별도 진행

■ 북콘서트(직업병 피해자, 현장실습, 산재피해자 관련 책 발간 시), 현장실습 피해가족 이야기마당, 언론 인터뷰, 여러 단체나 동아리와 간담회(산재, 현장실습, 중처법 등), 다음소희 영화상영회

■ 국제연대

- 2019년 10월 27일~10월 30일, ‘아시아 산재 및 환경피해자 권리 네트워크 대회’ 참여
- ‘피해자에서 생존자’ 로 라는 주제

■ 법 제도개선(제개정과 개악저지를 위한 활동)

-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활동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위해 단식과 동조농성, 릴레이 단식, 이야기마당, 기자회견, 집회, 증언대회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한 농성, 피켓팅, 기고
-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피해자모임 결합

■ 산재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 연대

-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스텔라데이지호 투쟁, 노조법2·3조개정투쟁, 팔레스타인 학살중단 투쟁,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이태원참사 투쟁 등등

■ 인권과 권리 교육, 연대사안, 사건 돌아보기 등 필요한 교육과 토론 진행

- 내부적으로 진행

■ 글쓰기, 그림 그리기 활동(다시는 성원 모임)

- 그림 그리기를 통해 치유 활동과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 마련
-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는 시간 마련

■ 전시회 ‘다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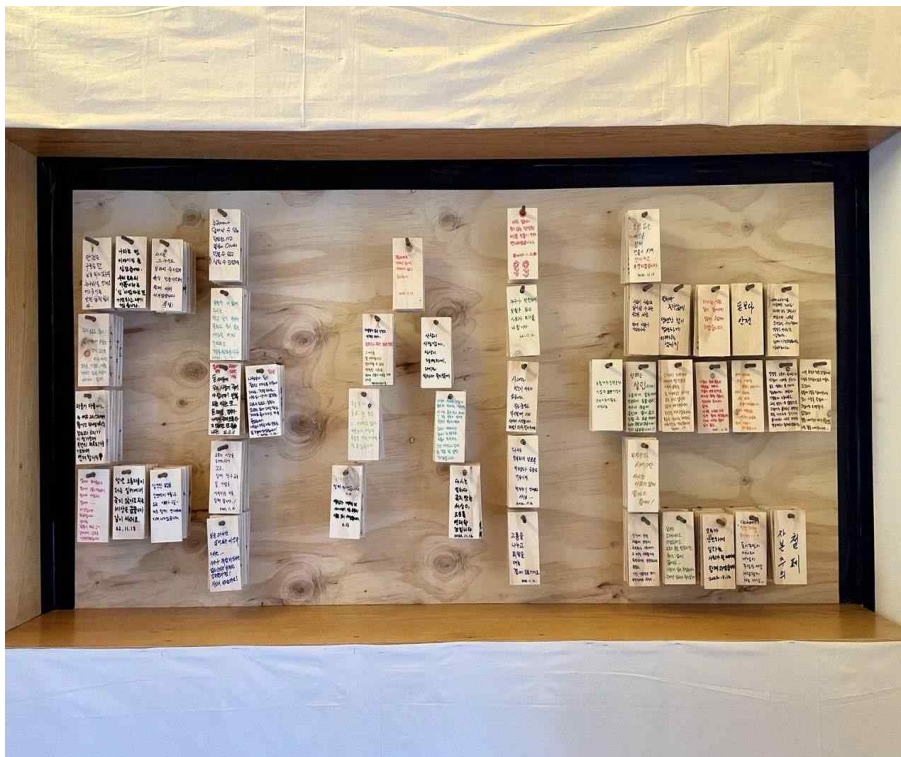
- 2022년 1월부터 준비하여 11/4~11/13 전시회 <다시는> 오픈
- 매달 공동워크숍과 개별 과제 수행, 지방에 있는 산재피해가족을 방문하여 워크숍 진행
- 전시회 <다시는> 은 그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모임으로 활동을 해온 피해가족과 활동가 뿐 아니라 함께 활동하지 않은 피해가족들도 참가
- 워크숍 과정부터 배제되는 이가 없도록 기획하고, 공동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사회·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여 배치. 워크숍 과정이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고 현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획



전시 참여자

- 강석경(CJ진천공장, 고 김동준 님의 어머니)
- 권금희 · 김기선(동국제강 포항공장, 고 이동우 님의 부인과 정모님)
- 김도현(ANC건설, 고 김태규 님의 누나)
- 김미숙(태인화학발전소,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 김선영(조선우드, 고 김재순 님의 아버지)
- 김선애(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고 김형주 님의 딸)
- 김혜영(tvN 혼술남녀, 고 이한빛 님의 어머니)
- 박미숙 · 장광(쿠방 칠곡물류센터, 고 장덕준 님의 부모님)
- 박소영(경화건설, 고 김일두 님의 부인)
- 박현민(한전노동자의 발)
- 신현숙(ANC건설, 고 김태규 님의 어머니)
- 오은주(한국마사회, 고 문종원 님의 부인)
- 이대료(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님의 동생)
- 이용관(tvN 혼술남녀, 고 이한빛 님의 아버지)
- 이재훈(명택항, 고 이선호 님의 아버지)
- 정석재(경동건설, 고 정순규 님의 아들)
- 최동범(쿠방 목천물류센터, 고 박현경 님의 남편)
- 홍순성(LGU+전주고객센터, 고 홍수연 님의 아버지)
- 권미정(단체활동가, 김용균재단)
- 김영민(단체활동가, 한빛미디어노동권센터)
- 영숙(단체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최명선(단체활동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시 기획 이춘열, 권미정, 이영주



함께 잘 활동하기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산재피해가족의 네트워크’는 시작부터 언론과 시민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산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개인에게 던져진 고통과 불안, 아픔을 연대와 위로의 힘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네트워크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는〉의 가장 큰 의미이다.

산재피해가족들은 피해자로서만 머무르지 않고 생존자로, 증언자로, 투쟁하는 주체가 되어 살고 활동하고 있다.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다르고 삶터도 다르다. 그것이 다시는 구성원들이 모이는 것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해야 할 대응과 활동에서는 힘이 되기도 한다. 다름을 전제로 각자가 존재하며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다시는〉이 유지 활동할 수 있다.

초기 여섯 가족과 십여 명의 활동가가 모여서 시작하여 현재 14가족과 4명의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피해가족들도 있다.

산재피해가족은 존재 자체로 고통에 대한 증언이자 개선에 대한 요구이다. 운동의 요구, 정교한 대안, 이성적 언어, 구체적 설명, 구조적 해석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느낌을 피해가족의 경험·감정·일상의 모습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운동의 언어를 생생한 감각의 언어로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피해가족이 가진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 피해가족이 재발을 막고자 하는 주체로 등장하며 운동은 확장되었다. 그리고 유가족은 사회운동과 만나 언어가 달라졌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감하기 쉬운 ‘가족’의 슬픔과 공감에서 출발한다는 강점이 동시에 기존의 가족주의를 공고히 하거나,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측면도 고민해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안식처’로 인식되는 가족 관계에서 특히 자식의 죽음을 직면하는 부모의 상실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의 성공기준과 다른 경로를 갔을 때 부모가 가지는 죄책감과 책임감은 더 강하다. 부모, 자식, 가족이라는 존재적 공감대는 ‘가족주의 도덕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성인 피해 가족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덕’적 요구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여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자격’을 과하게 제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피해가족은 활동을 위해 준비하던 이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 등을 가지고 있다. 상실감의 크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내가 고통스러우니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시간이 지난다고 상실감이나 고통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운동의 주체로 나선 피해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노력은 당사자들, 곁에 선 이들, 우리 모두 같이 해야 한다. 피해가족들은 이미 변화의 가능성을 행동으로 나타낸 과정이 있다.

〈다시는〉은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 활동과는 결이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이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모였다. 그 바람이 현실이 되는 데는 여러 걸림돌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는〉은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2024년 2월 말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교현장실습생으로 일하러 갔다가 죽음을 맞은 고 김동준(CJ진천공장, 마이스터고 3학년), 고 김동균(군포 외식업체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LGU+고객센터, 전주고교 현장실습생) 님의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다시는’에 모였습니다. 노동을 통한 학습이라는 ‘고교 현장실습생’이 되어 나간 사회에서 자녀의 죽음에 맞서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가슴에 품은 아들에게 “너처럼 죽지 않게, 엄마가 꼭 해낼게”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힐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회사와 국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키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 10월, 방송제작 현장의 비인간적인 현실을 고발하며 죽은 tvN 고 이한빛 PD의 가족들은 방송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한빛노동인권미디

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빛 님이 죽음으로 말한 것을 이어가기 위해 아버지 이용관 님, 어머니 김혜영 님, 동생 이한솔 님은 <다시는> 을 찾았습니다.

2019년 4월 경기 수원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님과 어머니 신현숙 님은 허망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뛰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아들과 딸, 누군가의 동생이 또 이렇게 죽고 진실이 감춰질 것을 생각하면, 진상규명은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다시는> 을 두드렸습니다.

2018년 3월 건설회사에서 과로자살하신 고 김일두 님의 가족은 죽음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화건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과로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에 <다시는> 에서 함께 싸우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산재사고에서 아버지(고 김형주 님)를 잃은 김선애 님은 어처구니없는 가족의 죽음에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무엇이랴도 해야 한다는 절실함에 참가했습니다.

장애인이라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려웠고, 힘들어서 퇴사했던 회사(조선우드)를 몇 개월 뒤 다시 돌아가야 했던 고 김재순 님. 위험한 일임에도 혼자 일했던 평상시대로 일을 하다 2020년 5월 22일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은 아들의 죽음에 싸우러 나선 아버지 김선양 님.

2021년 4월 22일, 아버지와 함께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본인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설비였던 컨테이너의 한쪽 날개가 내려앉으면서 목숨을 잃은 고 이선호 님의 아버지 이재훈 님.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재사망을 알고 이해할 나이가 되어 여전히 계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찾아온 한전노동자 고 박익산 님의 따님 박현민 님.

2019년 10월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하신 고 정순규 님의 아들인 정석채 님은 원하청에 대한 재판에서 제대로 책임이 묻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CJB청주방송에서 피디로 14년을 일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법정싸움을 하던 이재학 님은 2020년 2월에 고인이 되었지만, 동생인 이대로 님은 방송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성물질에 목숨을 잃은 쿠광 천안 목천물류센터 조리원이었던 아내 고 박현경 님의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싸웠던 남편. 쿠광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최규석 님도 다시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은 산재피해가족들과 함께 연대하는 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김용균재단,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킹 바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가들이(순서대로, 권미정, 최명선, 명숙, 김영민)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덧붙이며...

○ 유가족운동과 진상규명

유가족·피해자는 사고조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조사하고 확인하며 원인과 대안을 찾는다. 호소하는 목소리만을 내지 않도록 유가족, 노조(사업장노동자)·대책위의 공동활동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고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 유가족운동, 피해자운동

유가족이 산재 투쟁의 중심이 되는 법적 조건, 사회적 인식이 있음을 감안해도 유가족만이 투쟁의 유일한 주체는 아니다. ‘피해자’와 산재 유가족은 동의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가족만이 피해자로 인식되거나, 유가족이 나서서 투쟁이 아닌 경우는 투쟁이 어렵다고 단정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가족처럼 싸우기 위해 나서서 주체가 없어서이지 않을까. 유가족의 참여가 없는 투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량과 조건에 따른 목표설정과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예-사건 조사보고서 작성)

○ 유가족운동의 등장과 변화 요인은?

투쟁을 함께 하자고 나서서 노조, 시민사회단체 / 사회 인식 변화, 법제도변화

등은 결과적 변화이자 다시 영향을 주는 요인